

1997년 경찰급습에 아파트 추락死

“김준배씨 死因은 구타”

의문사족, 타살 결론

1997년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대생 김준배(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사진)씨의 결정적 인 사인(死因)이 추락이 아닌 구타라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서가 나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일본 법의학자에게 시신의 사진,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 검증을 받은 결과 최근 ‘구타가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지난해 김씨가 아파트에



서 추락했을 당시 밑에 있던 경찰들의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뒤, 추락과 구타 중 어떤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가 확인하기 위해 일본측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김씨의 사망을 ‘타살’로 잠정 결론 내리고, 조만간 의문사 확정 여부를 결정할 뒤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또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운

기(鄭倫基) 현 영월지청장을 상대로 규명위 소환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97년 9월 광주 오치동 C아파트 후배의 집에 머물던 중 경찰이 포위해 오자, 아파트 외벽 케이블 선을 타고 달아나다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후 경찰의 구타를 받은 가운데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일본 법의학자는 소견서에서 “김씨가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선을 타고 내려왔지만 3층과 4층 사이에 케이블 선이 한번 고정돼 있고, 고정된 밑에서 김씨의 손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봐서 지상 4m 높이에서 한번

■김준배 추락사 사건 현장도



멈춘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유단자인 김씨가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경향신문

“97년 의문사 김준배씨 사인은 구타”

日법의학자 소견서 제출

1997년 9월 광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의문 속에 추락사한 김준배씨(당시 26세·한총련 투쟁국장)의 주요 사인이 구타라는 일본 법의학자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일본

의 한 법의학자에게 시신의 사진,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 소견서 등을 보내 검증을 받은 결과 ‘김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보다는 구타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씨의 사인에 대해 추락 또는 추락과 구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구타가 주요 사인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지난해 9월 김씨가 경찰에 구타를 당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씨의 죽음에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말 일본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규명위는 조만간 의문사 여부를 확정할 뒤 당시 검·경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최종길·김준배 사인은 ‘양면성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대표적 의문사인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와 한총련 간부 김준배씨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신체를 이용, 몸 뒷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양면성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지난 73년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교수와 97년 경찰 추적 을 피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김준배씨(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 씨 사건의 법의학 감정을 담당했던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上山滋太郎) 박사는 5일 이들의 죽음이 ‘양면성 압박’이라는 유사한 사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가미야마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교수의 경우, 심장 우심방 뒷면과 ‘하대정맥’이 파열된 점 그리고 뒤쪽 늑골만 부러진 점 등으로 미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몸 전 면으로 뒤쪽에서 누른 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미야마 박사는 또 ‘최교수 추락 당시 으깨진 왼쪽 발목 등에서 출혈이 없는 등 사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최 교수가 양면성 압박을 포함한 고문으로 이미 숨진 뒤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미야마 박사는 김씨의 죽음과 관련, ‘추락높이가 4m정도로 높지 않고 추락 지점이 잔디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락으로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몸 뒤쪽에 있는 폐에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떨어진 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김씨 몸을 덮치거나 발이나 무릎으로 가격, ‘양면성 압박’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기타 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97년 사망 한총련국장 김준배씨

일 법의학자 “구타의한것”

“맞은 흔적 역력” 소견 밝혀

지난 1997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전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투쟁국장 출신인 김준배(당시 26살)씨가 추락이 아닌, 구타에 의해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 마사타로(69) 박사는 5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구타에 의해 숨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가

미야마 박사는 “김씨의 주검에 구타의 흔적이 역력한데다 3m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이 장과열로 숨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타로 숨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가미야마 박사는 또 지난 73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당시 42살) 교수에 대해선 “최 교수의 왼쪽 발바닥 상처와 뇌손상 일부는 이미 숨진 뒤에 난 상처”라며 “최 교수는 숨진 뒤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지평선

어떤 의문사

문창재 수석논설위원

1991년 2월20일 육군 00사단 포병대대 사격 지휘차량(2.5톤) 위에서 송모 일병이 상황판 받침대와 적재함벽 사이에 목이 끼여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서울대 재학 중 입대한 아들의 손어깨 등에 상처가 있고, 여러 곳에 멍이 들었으며, 목 부위에 압박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타행위로 사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군당국에 사인규명을 진정했다. 자살이라고 말하던 00사단측은 답변이 궁해지자 사고였다고 사인을 번복했다.

■ 진정을 받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사인을 본인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같은 차량에서 잠자던 동료들과 선임하사 소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황실험, 사건 기록을 추적한 9개월간의 조사 결론이다.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 지휘관의 사실 조작에 있었다. 대대장은 병사들이 사고차량에서 취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강요했고, 사고수습 과정의 조치 중 불리한 것은 삭제한 것이다.

■ 88년 6월20일 구보하다 쓰러져 숨진 우모 일병 사건은 분명한 사인(열사병)을 유가족

에게 납득시키지 못해 의심을 산 의혹사건의 전형이다.

그는 0사단 포병대대 유격훈련 마지막 날 장애물 코스를 뛰다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사단 의무대를 거쳐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수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들 만에 숨졌다. 열사병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은 심폐 소생술 시술입력을 명으로 남게 했다는 것인데, 부대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의문사가 됐다.

■ 두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사건·사고 처리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그 때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10년이 넘도록 의혹을 살 이유

가 없다. 검찰 고위 간부들과 가족이 관련된 이용호 게이트 처리를 바라보며 미심쩍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간부와 동료들이 관련된 의혹사건 규명을 같은 조직에 맡긴 검찰 특별감찰의 한계는 전에도 여러 번 보아온 일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간의 실패에서 배울 것이 있으리라.

cjmoon@hk.co.kr



의문사 규명에 시한은 없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난산을 거듭한 끝에 발족한 단체다. 의문사규명위에는 가혹한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던 자녀나 친지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도 의문사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가시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유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천막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400일이 넘게 농성을 벌여 얻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18일 발족 1주년을 맞은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1969년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 개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사건 83건을 추려 조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두 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지난 1년의 성과를 수치로만 보면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규명위원회는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출범한 조직이다. 의문사 사건들은 대부분 밀실에서 이뤄지거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간단하지 않다. 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다 인력, 시간상의 제약들이 많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청송교도소에서 숨

진 박영두씨 사건이나, 80년 보안사 부산본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운 목사 사건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사 사건으로 인정됐다. 유신 통치 때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이었던 장준하 전 〈사상계〉 발행인,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사망에 관한 의혹들도 상당부분 벗겨졌다.

위원회에 남겨진 과제는 아직도 수북이 쌓여 있으나, 시간은 별로 없는 편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건을 정리할 시간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 안에 성과를 높으려면 위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기관에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권력기관의 자세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찰간부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무시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국민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이 작업에 시한이란 있을 수 없다. 의문사 연루자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 될 것이다.

벽에 부딪친 '의문사 규명위'

특별법 개정 부진 유가족들 반발 확산 조사 지지부진... 민간위원 5명 출사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위원회)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사퇴에 이어 의문사 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 결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 등으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법 개정 추진 중단과 유가족 반발=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의 법 개정 추진은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 추진 중단 결정을 한 바 있다. 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최근의 여야대립 등 입법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최소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사면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들의 진술의무 조항 신설과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 공소시효 정지규정 신설 등도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벽에 부딪친 사건해결=위원회는 올 1월 의욕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 사건들이 자료 부재와 결정적인 증거 미확보 등으로 벽에 부딪친 상태다. 특히 80년대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관련 6건의 경우 보안사(현 기무사)의 비협조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83건의 의문사중 실제 처리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하다.

◆민간조사위원과의 갈등심화=지난 18일과 19일 민간출신 전문위원 5명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민간 조사관 20여명과 30여

명의 파견 조사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별 사건의 조사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심각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화사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사3과의 경우 개별 사건의 사인 규명을 위해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간 조사관들의 주장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망=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유가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 중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은 10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사건들은 대부분 조사 불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또 "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정책적 과제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가족은 "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 끝난다면 피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유가족·규명위 갈등 폭발

의문사 진상 13개월만에 위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3개월여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유가족과 위원회의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서 조사권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가운데 의문사 사건조사에서 위원회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자 민간조사관들까지 반발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유가족과 민간단체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공안사건등 조사 여부

유가족과 근본적 시각차

“권한미비 조사 한계”

민간조사관 반발도 한몫

통해 개별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전향공작, 학원프락치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 과거 공안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 청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원회측은 전체적인 역사청산은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에 때문에 개별 사건조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불안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오던 유가족들은 지난 97년 의문사한 광주대생 김준배씨 사건과 군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위원회에 철저한 내부개혁과 위상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장준하 선생의 부인 김희숙씨(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장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내고 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의혹 조사를 위해 현직 부장검사에게 지난 9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결국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또 당시 경찰이 김씨의 선·후배를 프락치로 활용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지만 계좌추적권이 없어 학원 공작의 실체규명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녹화사업 조사에서도 요시찰인 명부와 정기고서 등 핵심서류의 문서보존규정이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는 바람에 자료조사조차 한계에 봉착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군에서 의문사한 이운성씨 유가족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지난달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파견된 민간조사관들은 일부 국가기관 파견 조사관들이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작업을 거부하거나 사건조

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요구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원회가 지난 3일 내부적으로 불거 방침을 확정하자 위원회의 내외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한 유가족은 “공안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지만 위원회는 국가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조사시한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몇 건이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와 유가족들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의문사 규명위’ 파행위기

위원회-유족단체 조사권강화 싸고 대립

유족단체 “국가기관 비협조로 조사한계” 반발

官選-민간 조사관도 갈등... 집단사표 업무마비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둘러싸고 유가족·시민단체들과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진상규명위 내부에서도 시민단체에서 파견된 민간 조사관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서 파견된 국가기관 조사관들이 조사범위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민간 조사관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 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단체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쇠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수송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과거 운동권 학생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계좌추적권

및 강제소환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특별법 개정, 위원회 조사관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30일 “검찰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와 위원회 조사권한 미비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이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측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개정과 내부쇄신 등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측은 조사시한(2002년 4월)을 불과 5개월 남기고 법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의 내부 갈등도 위험 수준에 달했다. 과거 운동권 학생들의 프락치 활용 의혹을 받고 있

는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이달 초 열린 조사3차 회의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 파견 조사관들이 “녹화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할 경우 파견 기관으로 원대복귀시켜달라”고 반발했고, 이에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김학철 조사3차장이 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의문사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한 김과장은 A4 용지 20장 분량의 사퇴 이유서에서 위원회의 한계를 비판한 뒤 내부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측은 또 지난 15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유가족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해온 대외협력팀장을 조사과로 발령내는 등 사실상 경질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위원 3명은 “유가족과의 모든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내부 갈등에 대해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유가족과 개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자는 위원회의 근본적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의문사규명위 위기 민간조사관 출사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위원회의 위상 등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갈등을 빚어 오다 민간출신 조사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한 관계자는 30일 "시민단체에서 파견돼 활동해 온 김학철 조사3과장이 정부쪽 조사관들과 규명위의 조사활동 범위를 놓고 갈등

을 빚어오다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현주 대외협력팀장 등 민간조사관 3명도 그동안 유가족들과의 대화창구 구실을 해온 대외협력팀이 홍보과에 통합된 조치에 반발해 지난 19일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의문사특별법 개정과 조사관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등을 규명위에 요구했다. 최혜정 기자

의문사진상위 파행운영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의문사 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데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로 위기에 빠졌다. ●특별법 개정추진 중단 위원회는 지난달 3일 정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추진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며 법개정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족과 민간단체들은 "최소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은 사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계에 이른 사건 해결 위원회는 지난 1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이 자료 부재와 결정적인 증거 미확보 등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조사에 착수한 83건의 의문사 중 처리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했다. 녹화사업 관련 사건 6건은 기

무사의 비협조로 제자리 걸음이다. ●민간단체와 갈등 지난 18일과 19일 민간출신 전문위원 4명은 파견된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 대외협력실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위원회 조사관 50여명은 조사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중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10건도 안 된다"면서 "나머지는 조사 불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 끝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표기자 tomcat@kdaily.com

조사방법 싸고 내부갈등
민간위원 4명 집단사표

위원회 조사관 50여명은 조사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 규명위 '위기에'

조사싸고 갈등... 민간위원 4명 사퇴 특별법개정 추진중단에 유족들 반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사퇴에 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 결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 등으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간단체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사무실에서 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측의 의문사 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에 강력히 항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검찰 등 국가

기관의 비협조와 위원회 조사권한 미비로 진상규명 작업이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위원회측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정권 때의 대학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원회에 제3추적권 및 강제소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문사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시한(2002년 4월)을 불과 5개월 남기고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가 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며

특히 양위원장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 중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은 10여건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혀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83건의 의문사 중 완료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시민단체 출신 김학철 조사3과장이 위원회쇄신을 요구하는 A4지 20장 분량의 사퇴이유서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 출신 전문위원 4명이 집단 사퇴했다. 김 과장은 이 달 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해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녹화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할 경우 파견기관으로 원대복귀 시켜달라"며 반발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의문사규명특 파행 위기

조사권 강화 法개정 놓고 유가족과 대립

조사방법 갈등으로 민간위원 4명 사표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명위는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과 규명위의 조사권 강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민간 전문위원 4명이 사표를 내는 등 진통을 앓고 있다.

유가족 측은 최근 "규명위가 의문사 사건의 사인 규명에만 치중하면서 출범 초기에 약속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과거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규명위 측은 지난달 3일 "조사시한(2002년 4월)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법 개정과 내부쇄신 등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도 지난달 18, 19일 조사관 2명 등 민간 전문위원 4명이 규

명위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민간 조사관 20여명과 정부기관 출신 조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된 규명위는 최근 개별 사건의 조사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화사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사과는 사인 규명을 위해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간 조사관들의 주장에 정부기관 출신 조사관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큰 데서 발생한 상황으로 본다"며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조사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규명특 갈등 심화

위원회·유가족 특별법 개정놓고 논란

민간단체 위원 4명 사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권한과 위상을 둘러싸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출범 후 최대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 유가족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는 29일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위원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진상규명위의 조사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유가족측과 현실적인 한계론을 주장한 위원회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문사특별법 개정 추진 갈등=위원회는 이달 3일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추진은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추진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가족측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과 강제소환권 등 조사권

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특별법 개정, 위원회 조사관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인 출신과 공무원 출신 간의 반목=지난 19일과 20일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4명이 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과거 공안기관이 운동권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달 초 열린 조사3과 회의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 파견 조사원들이 "녹화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경우 우리를 원대복귀시켜 달라"며 반발했다.

이은경(李銀敬·여·4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의문사 진상 규명에 위원회가 소극적"이라며 "막강한 공안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파헤치기에는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 이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英哲기자 ycpark@chosun.com

의문사규명특 파행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梁承圭)가 조사활동 및 운영 방침에 반발한 조사과장 등 민간 직원 4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파행을 맞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30일 "1983년 전역을 앞두고 숨진 이윤성 (당시 21세)씨 등 6건의 군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조사를 진행하던 담당 조사과장이 내부 반발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군관련 의문사 조사를 총괄하는 김학철 조사3과장이 지난달 20일 3과의 군·경 파견 조사관들이 자신의 지휘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는 것.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조사가 부진하자 담당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유가족단체 출신인 금전과장이 조사3과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전과장이 80년대 기무사가 주도한 녹화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

를 지시하자 군·경 파견 조사관들이 '개별 진정사건 조사를 넘어 녹화사업 전체를 조사할 경우 파견 기관으로 원복하겠다'며 집단 반발했다는 것.

또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국민연대' 등 유가족 단체는 의문사위의 활동이 부진한데 항의, "과거 대학생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군·경 조사관 '녹화사업 조사' 거부

조사과장 등 민간 직원 4명 사퇴

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계좌추적·감제소환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덕형(文德炯)상임위원은 "일부 내부 갈등은 있지만 녹화사업 관련 조사와 이윤성씨 건 등 의문사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법개정 요구는 시한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한국 인권수준 여전히 미흡”

변협 인권보고서

“국가보안법 온존하고 반인권적 사건 빈발 의문사규명등은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 인권수준은 국가보안법 등 제도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온존하고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협(회장 정재현·鄭在憲)은 9일 개인의 자유, 노동, 교육, 여성, 환경 등 각 부문의 지난 한 해 인권 실태를 점검한 '2000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해 6월 롯데호텔 농성노동자 강제진압 사건을 대

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고, “경찰이 노동자를 앞뒤로 놓고서 곤봉으로 때리는 장면은 1980년대 군사정권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국가기구의 반인권적 성향이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 ▲네팔 출신 여성노동자가 정신병자로 몰려 6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사건 ▲텔런트 홍석천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이 거부된 사건 ▲반복되는 여성연예인의 성행위비디오 유포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성향을 대변해준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개는 “우리 사회에 청산해야 할 전체주의가 제도적으로 온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발족 등은 가장 특기할 만한 과거청산 및 개혁작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롯데 노조 불법성 외면

법무부, 변협 보고서 반박

한편 법무부는 롯데호텔 노조 강제진압 사건과 관련, “보고서는 노조의 불법성을 외면한 채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우발적 피해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외국인 인권침해 사범 615명을 기소하고 75명을 구속하는 등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변협 2000년 인권보고서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한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대한변협(회장 鄭在憲)은 9일 발간한 '2000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과거 반성과 개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의식측면에서는 여전히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이 꼽은 지난해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롯데호텔 노조 강제 진압 사건. 변협은 이에 대해 “1980년대 군사정권의 망

령을 연상시키는 한편 국가의 반인권적·전체주의적 속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소수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자 텔런트 홍석천씨의 경우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꼼위손상’ 논란으로 출석이 무산되고 네팔 출신 여성 노동자가 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변협은 국가보안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남북 정

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이뤄지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주저앉고 말았다”면서 “국보법 위반 사범의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등 무리한 법적용이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특히 “여성 연예인의 성행위 비디오 유포사건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을 엿보게 하는 사례였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권침해가 위협수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예인 몰카등 인권침해 심각

의문사·노근리 부각등 성과

변협은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출범과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등을 지난해의 성과로 평가하면서 “노근리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인권문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비판일보의 내용에서 벗어나 인권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비중 있게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현욱 기자**

<hyunock@joongang.co.kr>

복역중 사망 박영두씨 보상 둘러싸고

의문사·민중화보상·총돌

“재소자 처우개선 요구는 민주화운동”

“개인적 억울함 항거... 대상 포함 안돼”

1984년 청송교도소 복역 중 숨진 박영두(당시 29세)씨의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놓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와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대립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지난 6월 “차씨가 당시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의 집단 고문으로 숨졌다”며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바 있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7월 보상심의위측에 직권으로 보상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며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집단 사퇴도 불사’ =보상심의위

측은 “차씨에 대한 의문사위의 민주화운동 인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심의위 노경래(변호사)위원은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을 인정한다고 심의위가 무조건 수용하긴 어렵다”며 “개인적 억울함을 항거하다 숨진 차씨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경우 교도소 내 인권피해자 등 공권력 피해자 모두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의문사규명위가 6개월 넘게 방대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심의만 하는 보상심의위가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심의위가 우리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의문사위원들의 집단사퇴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두 위원회는 지난 11일 의견충돌을 위한 비공식 회합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양쪽의 모호한 권한 경계 =현행 의문사특별법에는 의문사위가 조사결과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로 숨진 사실이 밝혀진 피해자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해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상입위원 9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의 권한이다. 양쪽 견해가 충돌할 경우 조정기능을 할 곳은 현재 없는 상태. **정호식 기자**

<jjpol@joongang.co.kr>

기독교서평



유석성 서울신대 교수

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하여 1948년 12월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생각한다. 이날을 기념하여 12월10일을 인권의 날로 지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인권이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식되고 보장된 것은 1776년 미국의 권리장전이 최초이며 그후 1789년에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인권이란 생래적(生來的)인 기본적 권리로 인간들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영향력, 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날 때부터 부여받는 천부적인 것이고 양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개인은 자발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엠네스티, 만델라, 김대중대통령등 민간단체나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문, 투옥, 살해당하고 이름 없이 들끓처럼 짓밟히고 아침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과 정권유지를 위해

인권과 신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권리신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쟁취한 역사적 산물이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금자탑이며 인간정신의 위대한 기념비다. 지난 11월26일 3년여 준비를 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첫날부터 민원청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루 동안에 12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날 접수된 것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진정이었다. 국가인권위가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고 유린되는 곳에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대판 산고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계기로 이 땅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

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인권이란 생래적(生來的)인 기본적 권리로 인간들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영향력, 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날 때부터 부여받는 천부적인 것이고 양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개인은 자발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엠네스티, 만델라, 김대중대통령등 민간단체나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문, 투옥, 살해당하고 이름 없이 들끓처럼 짓밟히고 아침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과 정권유지를 위해

해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아픈 아니라 인간은 오늘의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면서 생태학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인권은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미래, 앞으로 다가올 사회와 살아갈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온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인간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은 화해와 평화와 봉사의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겨레 논단



홍세화 '아웃사이드' 편집위원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경쟁의식과,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집단적 무의식에 압도되어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 연대를 향한 길이 개인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면, 사회를 관통하는 연대의식은 사회가 그 구성원들 각자의 존엄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정된다.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듯이, 단 한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이라도 무시될 수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은 정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국가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되는 까닭은, 그 사람의 인권 자체가 중요하거나 그 사람이 사회의 연대의식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의식은 사회정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최종길 교수 살해사건과 수지 김 사건은 다시 국가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저당하게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일에 면적이 되어서일까,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기 때문일까,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가령, 탈세혐의의 즉별 언론 시주들을 종용하기 위한 동원에 동참했던 이른바 한국사회의 원로

국가폭력과 연대의식

들은 이 엄청난 사실 확인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정의나 연대의식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죽어 많이 없다 한들 그들의 인권이 탈세언론 시주의 인권이나 언론개혁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홍위병'이라고 불렀던 어느 문인의 '창작받지 않을 권리'에 비해 허울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균형 잡히지 않은 그들의 사회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하기엔 '사회 원로'나 이른바 '국민 작가'라는 말이 안쓰럽고 '어두운 시기를 잘 보낸 기록전자'의 다른 이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두 사건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저지른 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범죄를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국가폭력이 저지른 범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국민들에게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심리를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단결을 요구하는 국가안보의 강조가 실은 연대의식을 기초에서부터 흔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국가 안보를 앞세운 색깔론은 지역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식의 성장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국가 폭력의 또 다른 희생자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사법 살인에 참여했던 사실에 대해 소신을 밝히려는 거듭된 요구를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올라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대해 관련 책임자들이 기억 상실증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할 때 연대의식 대신에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란 의식이 팽배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사회정의와 연대의식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다.

나라의 안보와 질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관철될 때 사회정의와 연대의식은 성지리가 없어진다. 반면에, 사회정의와 연대의식이 서 있는 곳에 안보와 질서는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적어도 사회의 안보·질서 의식과 사회정의·연대의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60만이 넘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단결로 위원장을 질서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온건한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가 어겼다는 질서가 과연 누구의 무엇을 위한 질서인지 묻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의 질서·안보 의식은 사회정의나 연대의식을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열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긴다. 국가안보와 함께.

사설

'인권사각지대'에도 햇빛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74년 '인혁당 사건' 관련 공식 기록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밝히자, 국민들의 관심이 '진상규명위'에 쏠리고 있다. 30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왔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찌 이 사건뿐이겠는가.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관련자와 유족들이 독재정권이 조작한 공안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반응이 없다. 현 정부 출범 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가동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납북자는 어부 3, 692명을 비롯해서 1969년 피랍된 대한항공 승무원과 승객 51명, 군정 22명 등 모두 3, 790명에 이른다.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까지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고 각군 사관학교에도 지원할 수가 없었다. 정기적으로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가 하면 거주 지역을

벗어날 때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고, 재산이 늘어나면 '북한 공작금'이 아닌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1988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 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그렇다. 피해자들은 4만명에서 6만명에 이른다는데, 노태우 정권이 1988년 보상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서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피해자들은 또 어떤가. 야만적인 강요에 항거하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의문사했지만, 진상규명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협조하지 않아 명예회복마저 어려운 처지다.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은 물론, 정통성 없는 정권이 조작한 간첩사건이나 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 등은 '국가'가 국민에 가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뒤늦게나마 국가가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인권의 햇빛이 고루 비칠 때 비로소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인권 옹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시민단체 의문사규명위서 농성

"진정사건 조사의지 의문" 위원장 사퇴 요구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유가족 단체의 위원장실점거 농성으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을 향의 방문하고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양 위원장은 대부분의 진정사건을 철저한 조사의지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법의 한계만을 내세워 여러 의문사에 대해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기'

유가족단체, 파행운영 책임 위원장 퇴진요구 농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진상규명위)가 유가족 단체의 위원장 퇴진 요구로 출범 이후 최대의 진통을 겪고 있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2층 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해 양 위원장 퇴진과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진상규명위는 대부분의 진정사건에서 피진정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의지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위원회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양 위원장이 '녹화사업' 조사협조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하고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다며 위원장과 말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무에 걸맞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 강화와 기간연장, 위원회 조직의 재구성을 위한 법개정에 속속히 착수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원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규명위는 이날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이 긴급 간부회의를 연 뒤 "양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 단독이 아닌 9인 위원회의 합의 아래 내려지는 만큼 위원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또 "이번주 안에 위원 전원이 모여 유가족측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법의 한계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녹화사업' 문제 동만으로 위원회 전체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조사역량을 동원해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관련기관 비협조... 솜방망이 권한

'과거사 바로잡기' 좌초 위기

의문사 규명특위, 17%만 조사... 유족등 농성 '민주화 보상'도 국회처리 늦어지며 표류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2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보기에도 딱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이 규명위의 미진한 활동에 항의, 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연대 관계자들은 "422일 동안이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의 파누물론 만든 위원회를 유가족들이 또 다시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분루를 감추지 못했다.

■의문사규명위 사건처리 경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규명위 관계자들과 실전을 벌이고 있다. /류효진기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민적 여망속에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바로잡기'작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이 작업의 주역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관련기관의 비협조, 솜방망이 권한 등으로 '이름 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반민특위의 재판(再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규명위 내에서 1980년 녹화사업 조사를 놓고 내용이 불거졌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김·경과 국방부에서 파견된 직원 8명이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방식에 반발, "전정에 칼을 대라는 것이냐"며 원적 복직을 요구했고, 재야출신인 상

관 시뒀다. 규명위 관계자는 "파견자들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소환권과 강제수사권도 없어 조사가 곳곳에서 막히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규명위의 활동은 매우 실망스럽다. 규명위의 조사기간 만료일은 내년 4월20일. 불과 4개월여 남겨놓고 있지만 당초 진정 등에 따라 조사기로 했던 83건의 16.9%인 14건만을 조사, 종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규명위가 민주화운동 관련 타살로 정식 인정, 유일하게 보상심의의를 요청한 '박영두씨 사건'(1984년 청송교도소 복역 중 고문사)마저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

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보상편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 보상심의위도 개점휴업 상태. 이미 2,441명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했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심의위는 당초 올 예비비에 서 보상금 지급예산 96억원을 확보. 연내 보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와 일부 의원들간에 이견이 빚어지면서 국회처리가 늦어져 예산이 국고로 환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민주화국민연대 특별법개정·위원장 퇴진요구

위기 맞은 의문사규명특위

• 문제점·향후과제 원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7일부터 시작된 의문사 관련 유가족연합단체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농성과 위원장 퇴진요구 등으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의지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위원장은 철저한 조사역지 없이 적당주의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 퇴진과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위원회의 생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 성과=위원회는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83건을 조사해 왔다. 이중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씨 사건 등 2건을 민주화 관련 타살로 인정하고 15건은 기각되거나 진정인 스스로 취하였다.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제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처리는 절반도 못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은 검찰의 재조사에서도 밝혀지 못한 중앙정보부에 의한 고문과 간첩 및 사인 조작사실을 밝혀내고, 장준하 선생 추락사 역시 타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성과를 올렸다.

◇특별법상의 한계=관련법 제정이 역사적 진상규명이라는 소명외보다 마지못해 만들어진 성격이 짙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진상규명 대상이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일 이후로 돼 있어 '반쪽' 진상규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민주변호사협회와 유족들은 최소한 '1961년 5·16쿠데타 이후'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수사가 아닌 조사권밖에 없어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가 애당초 불가능했다.

◇관련기관의 비협조=조사과정에서 관련기관의 비협조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다.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의문사 관련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이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문식기자

69년 이후로 제한 반쪽규명 그쳐 관련기관 비협조·유족불만 난관 최종길·장준하씨 결과 파장 예고

순진 김준배씨 사건은 담당 검사가 소환에 불응해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특히 조사 대상인 법무부,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권력기관은 자체 조치보호에 급급해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인식이다.

특히 위원회 조사관들은 비미취급 인가가 나지 않아 각종 문서에 접근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다.

◇내부갈등의 문제=위원회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어정쩡한 조직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민간인이고 조사관은 대부분 검찰·경찰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다. 이중 민간 출신은 조사를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공무원 출신은 정확한 증거 없이 기존 조직을 흔들 수 없다는 시각차이를 보여왔다. 결국 대학생 강제징집(일명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민간인 출신 담당과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유가족과의 갈등=위원회와 유족들의 갈등 이면에는 지금껏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위원회는 지금

까지 15건을 결정하면서 단 2건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십수년간 '열사의 가족'으로 유가족 등에서 활동하던 유가족의 고초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돼 버린 격이다. 위원회측은 "유가족들의 아픔도 이해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들=위원회는 법개정이 없는 한 내년 4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산한다. 위원회는 몇몇 사건은 내년 초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공식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종길 교수건과 장준하 선생건은 특히 주목되는 사건이다. 특히 장준하 선생건은 박정희정권의 대표적 '정적(政敵) 살해'라는 측면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또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옥사한 장석구씨 의문사 재규명 작업에서 인혁당 사건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 사법계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자료가 전무한 사건 일부는 '조사불능'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권고하는 선에서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원회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이후락씨 역사앞에 증언하라



김삼웅 칼럼

생존한 한국현대 인물중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처럼 의혹과 배일에 가려진 사람도 드물 것이다. 박정희 독재시대 그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요리사였다. 마치 유방(劉邦)의 장자방(張子房), 히틀러의 부르크헤스와 비슷한 존재였다.

이씨는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정보실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면서 3선개헌, 1971년 대선, 박동선 공작사건, 1973년 김대중씨 납치살해미수사건과 최종필 서울발대 교수 의문사 사건들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조절위원회의 남한측 공동위원장과 제10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10·26사태로 박 정권이 붕괴되면서 불락길에 들어서 신근부세력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의 일부를 환수당하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제작을 하며 은거중이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 교수 의문사와 관련,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저배중세'란 다. 현재 77세로서 출두거부 이유는 '침병'일지 모른다. 이씨는 중정부장 재임중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두가지 '열기적'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1973년 8월8일 일본 도쿄의 DJ 납치살해미수사건과 같은 해 10월19일 일어난 최 교수 살해사건이 그것이다.

DJ는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 대통령과 자웅을 겨뤘 6개월을 득표한 야당지도자이고 최 교수는 유명한 국립대학 교수였다. 이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데 이씨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까지 진상을 밝혀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역사의 진실을 위하여

DJ 납치살해미수 사건과 관련, 이씨는 한때 자신의 소행임을 밝힌 바 있다. 사건 후 박 대통령은 미국의 칼립니스트 역 렌더는

에게 "나는 하나남게 맹세코 납치사건과 관계가 없다. 아마 중앙정보부의 소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80년 3월 동향친구인 최영근 전의원에게 "1973년 봄 박 대통령이 나를 불러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나는 곤혹스러운 나머지 실행을 마루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김종필과도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다시 명령을 내렸다. 김대중을 납치한 것도 나지만 살려준 것도 나다"고 말했다가 1987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하늘에 맹세코' 납치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금까지 드러난 납치사건은 이씨가 총지휘하고 김치열 차장과 이형희 차장보가 국내에서 지휘감독했으며 일본의 총지휘는 김기원 주일공사, 행동대장은 본국에서 파견된 윤진원 공작 제1단장이다. 김동운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등이 하수인이다. 납치사건을 '총지휘'한 이씨는 사건 후 중정부장에서 해임됐다.

최 교수 살해사건은 DJ사건과는 달리 권력형에서 모의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최 교수의 비중으로 보아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지 모른다. 정황상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다가 숨지거나 위협해지자 자살로 꾸미고자 중정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개연성이 크다. 며칠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중정부차장 '조사를 담당한 중정부차장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을 다른 중정부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988년 10월 최 교수 의문사 관련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차철권 당시 주무 수사관을 비롯, 고문 관여자와 이후락 부장·김지열 차장·조일재 차장보·안경상 수사국장등 수사라인상의 명단이었다.

이후락·김지열 출두해야

최 교수 의문사 수사라인 책임자 이후락, 김지열씨는 당시 중정의 구조나 기능으로 보아 최 교수 살해의 은폐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지금 '하수인'들이 사망·도피·중언거부를 하는 마당에 수사지휘 책임자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에는 지난 8월 두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약속이나 한 듯이 '차에 등 건장' 상의 이유로 출두불가를 통보했다. 규명위가 재소환에 나섰고 '차에' 관련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방침이라 한다.

두 사람은 이제 인생 황혼녘에서 국민과 역사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회를 위한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무덤까지 '원죄'를 가져갈 것인가. 우선 진상규명에 출두할 것을 촉구한다.

●주필 kimsu@ktdaily.com

의문사 규명 멈춰서는 안된다

독재정권의 부정적 산물이자 현대사의 오점을 씻어내기 위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위원회 내부의 갈등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적 여망을 업고 출발한 '과거사 바로잡기' 작업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들이 1년여 이상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펴면서 절규 끝에 이루어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첫 활동 후 최종길 교수와 장준하씨의 공권력에 의한 타살의혹 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년6개월 활동시한을 4개월 남짓 남겨둔 현 진행과정은 진정 등을 포함해 당초 조사하기로 했던 83건 중 14건만 종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실 위원회는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수사가 아닌 조사권밖에 없어 진실접근이 쉽지 않았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 소위 권력기관이 비협조적인 것도 큰 문제였다. 이는 80년 군 녹화사업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이 최근 불거지면서 기

무사기 자료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방문 요청을 거부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어정정한 조직성격도 장애여서 파견된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기관에 손대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역사의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또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위원회에 소환권과 강제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은 나머지 짧은 활동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실익이 적어 보인다. 위원회의 우선 과제는 내부갈등을 마무리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목적에 맞게 역할을 모으는 일이다.

의문사 사건 대부분이 독재권력과 그 하수인이었던 강압적 권력기관의 산물인 만큼 이들 기관은 조직 자체가 거듭난다는 자세로 협조를 다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 제2의 반민특위로 만들 수는 없다.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법개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의문사 진상조사위 못믿겠다”

88년 노조 활동하다 변사한 정경식씨 어머니 “규명 의지없다” 유가족들과 위원장 퇴진 농성

“이래 가지고 우리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겠나... 낙심이 돼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지난 88년 6월8일 실종됐다가 9개월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전 대우중공업 사원 정경식(당시 28세)씨의 어머니 김을선(68)씨. 지난 17일 마산에서 올라온 김씨는 다른 유가족 20여명과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참여했다.

수십년 동안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지 않고 또다시 의문사로 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다. 이들은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와 조사권 강화 등 법 개정을 촉구하며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저녁 경남 마산

에 내려갔다가 20일 다시 올라왔다. 노환을 앓고 있는 90세 시어머니 봉양과 생계를 위해서는 생선장사를 마냥 멈출 수는 없기 때문.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친 뒤 목발로 겨우 돌아다니는 남편과 정신병이 있는 큰아들도 김씨만 쳐다보고 있다.

김씨는 “진상규명위 조사관들이 마산에 몇 번 내려와 조사할 때만 해도 큰 기대를 가졌는데, 핵심인물은 제쳐두고 주변인물들만 조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5년 동안 오직 아들의 죽음이 진상규명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집회가 열리는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다. 김씨는 “그렇게 해서 만든 진상규명위마저 옛날 정권 잡았던 세력



아들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김을선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들의 조사 방해로 힘을 잃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씨의 아들은 당시 대우중공업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운동에 참여한 뒤 어느날 회사 간부의 전화를 받고 갔다가 실종됐다. 김씨는 사체가 발견된 창원 불모산은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9개월만에 발견될 수는 없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한|국|시|론|



공권력의 인권침해 국가배상을

최근 '수지 김 피살사건'과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한 신문 보도를 접하면서 새삼 국가란 무엇이고, 기본적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게 된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권력을 국가에게 부여한 것은 국가가 그 권력을 정당하게 잘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권력은 국가가 갖고 있어도 속성상 항상 남용의 여지가 있기에,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장치를 해 둔 것이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

'수지 김' 국가권력 남용

검찰이 수지 김 사건을 재수사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하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대 최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냄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과

같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처리는 민주국가 존립의 기본이다.

수지 김 사건을 보면 3가지 중대한 법익이 충돌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법익, 즉 국익이다.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안보가 중요한 국익일 것이다. 헌법에도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중 본질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정권의 이익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수지 김 피살사건은 국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반공논리가 득세하면 5공화국 말기 당시의 '유성환 의원의 국시논쟁' '문익환 목사 범일복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조작한 것으로

범해졌다. 즉 5공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인기부가 상당히 조사를 하여 남편 윤태식씨가 수지 김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를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은 명백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국익보단 정권위한 조작

또한 정권이 비판 후에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를 부당하게 중단시키려 한 이씨, 김씨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수지 김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또는 그 이후 은폐를 시도한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논리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면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한 전 날인 2000년 4월25일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등의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윤씨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검찰이 불공정 수사 시비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검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극히 낮은 비율의 사건만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윤씨에 대한 기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도 신중한 판결을

마지막으로 피살된 수지 김의 인권 즉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수지 김은 남편 윤씨에게 살해당했다. 14.15년간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진실이 은폐되어 온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하여 진실이 밝혀진 이 사건은 단순히 피의자의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자 수지 김의 인권이 남편 윤씨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것으로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

의문사 규명위원 3명 사퇴 유가족 농성풀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개혁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규명위에서 6일동안 농성을 벌여온 의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후 농성을 풀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쇠신을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이날 "진상규명위가 일단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농성을 풀었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에 앞서 위원 9명 가운데 양승규 위원장과 백승헌 변호사를 뺀 7명 위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을 포함한 법개정과 위원회 활동기조를 바

꾸기 위해 상임위원단 재편성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와 카톨릭대 안병욱 교수 전북대 이석영 교수 등 규명위 비상임 위원 3명은 이날 오후 9인 위원 진원회의 뒤 규명위의 개혁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의문사규명위원회 3명 사퇴

“제 역할 못한다” 성명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 비상임 위원 3명이 22일 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석영(李碩榮·전북대 교수, 안병욱(安秉旭) 가톨릭대 교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9인회의에서 “지금은 위원회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로 이를 사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해를 궁극의 목적으로 해야 할 위원회가 표면적인 문제나 단편적인 국면에 머물러 진실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과 백 위원을 제외한 위원 7명은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법개정 및 상임위원단 재편성과 관련 권력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부터 위원장 퇴진과 법개정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2일 오후 8시경 농성을 풀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추 비상임위원 3명 사의

조직 쇠신 등 재편 착수

유가족들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접거농성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어 온 의문사진상규명위(梁承圭위원장)의 비상임위원 3명이 위원회의 쇠신을 요구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의문사위측은 23일 “지난 22일 9인위원 전원회의에서 비상임위원인 안병욱(安秉旭·가톨릭대 교수)·

이석영(李碩榮·전북대 교수)·백승헌(白承憲·변호사)위원 등이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4일 이들의 사퇴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한편 청와대측과 협의해 상임위원단 쇠신 등 위원회 재편에 착수키로 했다.

정호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의문사규명위원회 개혁촉구

비상임위원 3명 사퇴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梁承圭)의 비상임위원 3명은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에서 열린 위원회 9인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위의 개혁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안병욱(安炳旭·53·가톨릭대 교수), 백승헌(白承憲·38·변호사), 이석영(李碩榮·65·전북대 교수) 위원 등 비상임위원 3명은 “유가족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뜻에서 위원직을 사임코자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공권력 살인' 진상 밝혀라

김중희

"응수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과거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몇 주 깊어 사무친 한을 안고 있지만 기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권력의 죄상을 밝히고 국민을 위하는 공권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1973년 간첩단 사건과 연루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서울대 최중길(崔重吉·당시 42세) 교수의 아들 광준(光準·37·경희대 법대 교수)씨는 23일 "의문사건 상규명위의 조사로 아버지가 중정 직위에 의해 타살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공권력이 회개해야 진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최 교수의 유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전이 의문사였을 때 9살이던 광준씨는 "중정의 감시가 지독해 의욕을 제기하기는커녕 추모 미사를 여는 것마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다섯번이나 옮겨야 했고 장례식 때에는 문상객을 환영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위한 기관 거듭나야

최 교수의 동생 종선(鍾善·54·재미 사업)씨의 운명은 더 비극적이다. 사고 당시 중정에 근무하며 형을 자진 출두시켰던 장본인이 종선씨였다. 종선씨는 '호랑이 굴'인 중정에서 81년까지 '아름다운 근무'를 하며 진실을 밝혀라 했다. 퇴직 이후 중정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 충격을 가장, 병원에 입원해 형의 죽음에 대한 정황을 탐험하기 위해 '산자'에 발라라. 그의 형 최중길 교수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수기를 지난 3월 출간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등 유신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75년 8월 경기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정준하(鄭俊河·당시 57세) 선생의 유가족들도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75)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졸졸히 지내며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도 5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살고 있는 둘째아들 호성씨(48)를 데리고 약사봉을 돌리곤 한다.

선전의 뜻을 잇기 위해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호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형은 취직 길이 막혀 싱가포르로 도망치듯 떠났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보기관원과 경찰이 우리 집에서 상주했다"고 회고했다.

최근 안기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수지 김 살해사건'의 유족들 살은 산산

의문사 규명없이 '대화합' 요원 유가족 "처벌보다는恨 풀었으면"

조각난 상태다. 수지 김(본명 김옥분)의 여동생 옥림씨(40·충북 충주시 청암동)는 "어떤 보상으로도 국가권력의 횡포에 희생당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것"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진실밝혀져도 사죄 없어

수지 김의 어머니와 7남매 가운데 맏딸 옥내씨(당시 42세)는 수지 김이 살해된 87년 분을 맞이해 정신이상으로 숨졌다. 둘째 단식씨도 연일 슬로 화를 달래며 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옥림씨는 "오빠는 언니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다 울분을 참

- 글 쓰는 순서 ●
- ① 공권력 이대로는 안된다
- ② 미세사건도 파헤쳐야 한다
- ③ 시스템 정착시켜야 한다

지 못해 거리로 뛰어나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넷째 옥자씨(48)와 여섯째 옥영씨, 막내 옥희씨(34)는 사건 이후 남편에게 버림당한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 다섯째 옥경씨(44)는 변천가계를 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옥림씨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어떻게 14년 동안이나 살인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은폐·왜곡할 수 있느냐"면서 "공소시효를 들어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의 공권력이 민초들의 편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다음달 2일 충주시 한 사찰에서 홍공 수지 김의 묘에서 피은 흙으로 '천도제'를 열 계획이다. 옥림씨는 "사건의 진상은 밝혀졌지만 아직 사회 변화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군, 경찰, 안기부 등에 의해 자살을 잃은 의문사 유족들은 지난 17일부터 1주일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양승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425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출범시킨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족들은 "공권력이 진상규명 작업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의문사 규명위가 과감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에 의한 아들의 타살을 밝혀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자살한 부모도 있고, 유서를 품고 다니며 죽을 각오로 진상규명에 매달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현이 풀릴까요?"

농성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수백번을 되풀이했을 법한 자식들의 의문사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이창규 기자 window2@kddaily.com

"사건조작 알게 된 날부터 시효 적용"

입법추진 합승회의원

최근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서울대 최중길(崔重吉) 교수 의문사 사건. 수지 김 살해 흔적 사건 등과 같은 변(변)사회·반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폐지하는 입법이 언내에 추진된다.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의 소속 민주당 합승회(咸承熙) 의원은 23일 "반인권·변사회적 범죄는 기존의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건의 은폐 및 조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 처벌을 받는 내용을 담은 가정·변사회·

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언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합 의원은 "의도적 증거조작이나 은폐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규기자 isam@kddaily.com

의문사규명위 안팎 시련

비상임 위원 3명 전면채신 요구 사퇴 비대위-민간인조사관 특별법 개정 촉구 획기적조치 없을때 파행 장기화 될듯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적 채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농성을 풀었으나 진상규명위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민간 출신 조사관들도 이에 동참하는 등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 위원 3명이 위원회의 전면채신을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 위원회측이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진상규명위의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소속 유가족들은 24일 진상규명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의문사 특별법 개정과 위원회 상임단 재편성 등 위원 7인의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위원회측에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위원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가족 전원이 진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출신 조사관들도 이날 양승규 위원장에게 보낸 민간 조사관 전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의문사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백승현(변호사), 이석영(전북대 교수) 위원 등 3명의 비상임 위원이 현 위원회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위원회 안팎에서의 이같은 '양날개 압박'으로 지금까지 특별법 개

정 등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온 위원회측은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에 나서야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 활동 시한이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몇 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진정 사건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도 조사관 강화등 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해온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기 극복 여부는 양위원장이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비상임 위원 3명의 사퇴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됨에 따라 인사권자인 김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파행 장기화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진정한 역사청산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위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유가족들 집단 진정취하·위원 3명은 사퇴...

의문死진상규명위 '파행'

강제소환권 등 포함 특별법 개정 요구

법적구조 한계... 민간위원도 퇴진 조짐

의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운영방식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진정 취하각서를 집단으로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유가족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쇠신을 위한 비대위는 진정 84건 가운데 최종규·이철규건을 포함한 38건의 진정 포기각서를 24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계좌추적권, 통화내역조회권, 강제소환권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조사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다른 유가족들도 위원회의 개혁 노력이 없으면 진정취하 각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2일 위원회 소속 이석열 안병욱 백승현 등 비상임위원 3명은 "법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므로 법개정 등 근본적인 보완책을 촉구한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간 조사관들도 위원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퇴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위원회의 개점휴업이 우려되고 있다.

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유가족들이 개별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강제징집, 녹화사업, 전향공작, 학원프락치 공작 등 과거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위원회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개별사건의 진

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회와 유가족은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심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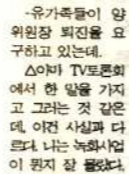
결국 지난달엔 녹화사업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과검기관 공무원들이 "녹화사업을 조사하려면 원직복직을 시켜달라"고 강하게 반발해 담당 조사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6일 양위원장이 모 방송사 대담프로그램에서 녹화사업을 '정훈교육'으로 표현한데 대해 유가족들이 격분, 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위원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유가족들이 진정 취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 따라 위원회는 존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학준기자 arisu@kmib.co.kr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퇴진' 논란

의문사진상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유가족들이 양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 TV토론회에서 한 말을 가지고 그리는 것 같은데, 이전 사실과 다르다. 나는 녹화사업이 뭔지 잘 몰랐다. 근데 토론회에서 녹화사업이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고 기무사 방문 시 시령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전에는 기무사 녹화사업에 대해 신성한 국명의 의무를 차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등 중



들이 힘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하지만 법적인 한도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도의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조사할만한 사건은 다른기관에서라도 해야 한다. 한시기구려 한계가 있다.

진상규명위 활동의 그동안 성과라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파행 유가족의 '양승규 위원장 퇴진' 농성으로 권력소속...
강제징집, 녹화사업...
명위가 법적 한계를...
유가족들이 위원장 퇴진...
의 입장을 들어왔다.

들이 힘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하지만 법적인 한도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도의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조사할만한 사건은 다른기관에서라도 해야 한다. 한시기구려 한계가 있다.

"말실수 트집잡기 그만두세요"

조사 한계로 유가족 요구하는 '부당 공권력행사' 규명 예로

분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지 않은 채 앞 뒤를 잘라 트집을 잡고 있다.

△반야들이 수 없다. 조사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 단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 추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불능이란 결과기 나오는 것이다.

-불충분한 조사 결과로 면회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성이 계속되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온다. 무책임한 일이다.

△최종길 교수건만에도 검찰이 못박힌 것을 예냈다. 관련 인물, 기관의 협조 분위기 등이 조성 안돼 어려운 점이 많지만 최선을 성과를 거둬다. '권안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한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

법개정을 통한 권한 확대도 반대는 안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수사권 확대 등은 국가권력 행사문제의 연

연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유가족들과 협의의 열이 있는가. △농성이 계속되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온다. 무책임한 일이다.

농성 유가족 강민조 씨



-양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가족들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판단해 더 경험 많은 사람을 모셔서 명예롭게 나가야

했다. 녹화사업만 해도 우유부단하게 기무사 자료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등 처사가 바르지 못했다.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의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양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또 진상규명위가 잘 알려진 일부 사건으로 활동성과를 치장하면서 대부분 사건들은 적당히 처리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

"양위원장 능력부족 물러나야"

독단·파행운영에 운동이해 부족 진상규명 걸림돌

들 7월부터 해왔다. 그럼에도 독단적이고 파행적 운영으로 내부 마찰을 빚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행동을 취하게 됐다.

-문제 해결 방법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려면 의문사가 뭔지, 민주화가 뭔지를 비롯적으로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법률 고쳐야 한다. 법적인 제약이 많으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허사다. 민주화 역사 되찾기 관련법들이 현실적으로 정면 개정돼야 한다. <이재훈 기자 y24h@ngms.net>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하고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

려와 기회를 줘야 한다. -지난 8월 고 김경대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로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다른 유가족들에게는 무척 미안하다. 의문사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 이 분들의 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의문사 규명위 “특별법 개정 작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 작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진상규명위가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최근 법개정과 상임단 재판성 등을 요구한 유가족의 농성과 이어 나온 진상규명위 위원 7명의 공동입장 표명에 따른 것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법개정에 대한 유가족측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26일부터 의문사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에는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방안 등 유가족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의문사특 파행 위원장 사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은 14일 비상임위원 3명의 사퇴 등 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겪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퇴서를 15일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 제1상임위원과 문덕형 2상임위원도 함께 상임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양위원장은 이날 사퇴발표서를 통해 “지난해 말 일부 유가족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으로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중 공무원 신분인 제2상임위원을 제외한 2명은 사퇴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상임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홍주연 기자

<jddream@joongang.co.kr>

의문사 조사권 강화 추진

규명위, 시한연장등 특별법 개정나서... “유가족과 협의 확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규명위 관계자는 28일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 등 그동안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을 29일 열리는 규명위 전원회의에 올려 논의한 뒤 유가족과 협의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규명위 활동의 핵심인 조사권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규명위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명위의 출석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명위의 자료 및 조사활동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을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등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4월로 끝나는 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위원들의 임기인 오는 10월까지로 연장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조사활동을 위한 계좌추적 및 감청권 △증언자에 대한 면책권 등 그동안 유가족 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을 대부분 담았다.

규명위 관계자는 “규명위는 법률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입법 형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연합·추모단체연대의 등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4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명위의 혁신과 의문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규명위는 민주적 운영을 포함한 전면적인 체제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문사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의문사진상특 위원장 사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이 3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일부 유가족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위원회를 불신하고 있어 양승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모두

비상임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비상임위원 3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원회복지자

의문사특법

'의문사특법' 위원장등 3명 사의

'파행 운영' 관련 청와대에 상임단 교체요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양승규위원장 등 상임단 3명의 교체를 청와대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양 위원장, 김형태 제1상임위원, 문덕형 제2상임위원 등 3명은 유가족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와 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책임을 지고 1월 15일까지 새로운 상임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12월 17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위원장 퇴진과 조사권 강화 등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6일 동안 벌였던 농성 사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지난 22일 제출한 비상임 위

원 3명의 사퇴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상임단마저 사의를 표명, 청와대측이 조속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상임단을 계속 불신하고 있는 이상 현 체제로는 더이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힘들다고 판단, 상임단 교체를 요청했다"며 "유가족들에게도 유가족이 원하는 상임단을 추천해달라고 위원회측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12월 22일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 유가족·조사관·위원들의 법 개정 의견을 수렴해 오는 2월 임시국회 전까

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조사기한 연장, 계좌추적권 등 조사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손석준의 여론일기



"까치야 까치가 뿔하러 왔네! 때때웃도 없고 색동저고리도 없는 이 마을에."

고 김남주 시인의 새해 노래다. 새로움 없는 새 아침에 시인은 풀을 표를 보낸다. 까치가 닭이 궁궐을 밟았다. 덕담을 할 샅에 벽두부터 슬픔에 잠길 뜻은 없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새 아침을 맞았는가. 아니다. 새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올해 15년 전 '새해'로 돌아가 보자. 전두환 정권은 한 청년을 연행한 뒤 '전살'로 남을 발표를 했다. "적상을 딱 치니 먹 하고 죽었다." 그 말을 수백명이 믿었다면 어찌됐을까. 6월 대항쟁은 미뤄지고 박종철은 의문사 명단에 자리할 터이다. 다행히 고문 진상은 드러났다. 하지만 15년이 흐른 오늘도 진실이 은폐된 죽음은 속하다.

예오라지 유족들이 예면결면 싸워왔다. 살인범을 밝혀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강파른 길을 걸어야 했다. 의문사를 추적해야 마땅할 언론은 시치미 댔다. 가슴에 피멍 든 어머니·아버지들이 흰 머리에 잔이슬 맞으며 422일을 길 위에서 밤낮으로 농성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됐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이 마감을 앞둔 오늘까지 80여건에 이르는 의문사 대부분은 어둠에 묻혀 있다. 국정원·기무사·경찰·경찰의 '적극적인 비협조' 탓이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 요구에 '회신 지연'은 예사다. 아예 거부하기 일

의문의 죽음들

쉴었다. 언론 또한 일부 저명인사의 의문사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권력기관의 비협조는 방관했다. 무슨 잠남일까. 혹 '공범'이 어서일까.

비협조에 언죽번죽 '명분'도 내건다. 의문의 죽음에 '좌경'이 많단다. 비밀·공안 문서로 처리해 놓았다. 위원회 활동이 점차 피폐한 의문의 죽음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 되기 십상이다. 여백하면 유족들이 위원회의 전면 혁신을 내걸고 농성을 벌였겠는가. 그래서다. 김대중 정권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구성한 것만으로 일을 다했다고 자위한 다면 큰 오산이다. 권력기관이 결거니를거니로 협조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 정권에 있다.

의문사는 일그러진 한국현대사의 산물이다. 진상규명은 결코 유족과 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다. 언론인은 물론 '살아 있는 자' 모두의 의무다. 민주와 통일을 가리켜온 온 수구세력의 죄를 밝혀 참된 화해에 이르는 데 진상규명의 뜻이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살의 진상을 은폐한 수구세력은 예의 진실을 감추며 되돌아보 눈을 굴린다. 신문권력은 본디 그렇다 치자. '박권상 체제'의 한국방송은 지난 4년 동안 그 막강한 여론형성력을 도대체 어디에 펼친했는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짓밟는 나라, 냉전세력이 저들만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의문의 죽음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까지 흐지부지 끝나다면 비단 남우세스런 일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 우리 시대를 과연 용서할까. 그 정도의 자정능력마저 없기에 외세가 우리를 줄곧 시들방귀로 여기는 게 아닐까. 보라. 미국이 백범 암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도 그저 그런 아닌가. 암살 진상을 밝혀라 하는 정당한 요구조차 답답히 하지 못한다.

미국과 수구세력이 반세기 넘도록 저지른 의문의 죽음들은 지금도 지하에서 원혼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덮고 있는 현실 밑에 얼마나 수많은 피물들이 깔려 있는가. 그 원혼과 피물들 위에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족정기를 말하기도 썩스럽다. 심지어 친미사대주의 언론은 '전쟁의 해'를 선포한 조지 부시 정권을 부추기는 '불장난'도 서슴지 않는다. 생계망개한 일이다. 새해이되 새해가 아닌 까닭이다.

정년 언제일까. 이 땅에 새 아침을 열 그날은. 민주와 통일의 길에 목숨 바친 저 수많은 넋들이 편히 쉬 그날은. 뿔하러 왔네. 까치에게 묻지 않아도 풀을 새해는.

여론대책부장 songil@hani.co.kr

의문사 유족농성 책임 규명위 동반사퇴 파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14일 동반 사퇴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장 및 팀장 10여명도 동반 사직서를 제출해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마비 위기에 처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유가족들의 위원장실 점거 농성과 비상임위원 3명의 상임단 교체 등을 주장하는 사퇴서 제출로 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장직을 떠난다"고 말했다.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과 문덕형(文德炯) 제2상임위원도 이날 "진상 조사의 총책임자로서 위원장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이 15일 사퇴함으로써 이 기구의 앞날이 기로에 섰다. 비상임위원 3명이 이미 사퇴해 기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가족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의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기구의 실무급 간부들도 곧바로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기구의 기능이 마비돼 활동이 중단될 처지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가족측의 눈물겨운 노력과 투쟁의 결실이다. 이 기구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비뚤어진 역사 바로잡기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측과 진상규명위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협화음이 계속돼 왔다. 거기에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조사 요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자주 도마에 올랐고, 수사 및 관계자 소환 등에서의 강제성이 없어 고비마다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예컨대 국내 의문사 제1호로 기록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의 진상이

28년 만에 베일을 벗는가 했으나 관계자들이 출석을 기피하는 등의 벽에 부딪쳐 여전히 타살 의혹만 부풀려 놓은 채 조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중앙대생 이내창씨가 의문사한 사건 역시 새로운 증언이 나온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끈질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측이 핵심 자료 제출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한 결과지만 안타깝게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실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활동시한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건의 조사 대상 중 불과 17% 정도만 조사가 종결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난관에 봉착한 것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여태껏 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활동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번 사퇴 파동은 유명무실한 인권 기구들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다만 한꺼번에 전부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정권의 임기 말이다.

의문사총장등 3명 "사퇴서 제출"

실무급 간부 10명도 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양승규(梁承圭) 위원장 등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3명이 15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유가족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퇴서를 청와대에 제출키로 했으며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도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 실무급 간부 10여명도 이날 사퇴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원들에 이어 실무급 간부들마저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상규명위의 활동은 당분간 실질적 공백상태를 맞을 전망이다.

/정영오기자

규명위 상임위원 3명 사퇴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양승규 위원장을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3명은 15일 오전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양 위원장과 김형태, 문덕형 상임위원은 이날 진상규명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상규명위는 사퇴서가 수리되고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집행부 공백상태를 맞게 됐다.

의문사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상임위원 2명 모두가 사퇴서를 제출, 공식적으로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공무원 출신인 제2상임위원이 사퇴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위원회에 나오기로 해 사실상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오후 집행부 사퇴에 행동을 같이 한다며 집단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과장과 팀장 등 실무급 간부들 10여명과 일부 조사관들은 이날 진상규명위에 정상 출근, 업무마비 사태는 없었다.

위원회내 민간-파견조사관간 갈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위원회와 유가족간 갈등은 연말 유가족의 농성과 비상임위원 집단사퇴 그리고 이번 위원장 사퇴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단은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후임 위원장을 추천하는데 청와대와 유가족측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작업과 민간 조사관을 제외한 위원회와 유가족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작업이 쉽지않은 만큼 앞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원회 파행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가족 관련단체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는 이번 집단 사퇴서 제출에 대해 "위원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유가족측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이며 위원회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위원장이 사퇴한 만큼 위원회 내부개혁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연합시론> 의문사규명 활동여건 만들어줘야

(서울=연합뉴스) 기대 속에 출범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언젠가는 비상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실무급 간부 10여명도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사퇴의사 표명, 복귀, 사표제출 등 일련의 모습들이 어지럽다. 상임위원 모두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집행부가 공백상태에 빠지는 것은 물론 위원회 활동 자체가 사실상 개정 휴업상태에 접어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 내부의 민간 조사관과 국가기관 파견 조사관 사이의 갈등, 위원회와 유가족 간의 갈등이 이번 사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위원회 설치의 본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난 1969년 3선개헌 이후 30여년 동안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을 단 몇 개월 안에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본다. 법 개정으로 활동 시한을 최대 연장한 것이 오는 4월까지이다. 수십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1년 반 사이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부터가 무모하다.

그 동안 위원회는 의문사 진상 규명 작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종 길 교수 사망 건은 타살혐의가 없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고 최근에는 이태원씨 사망사건에서도 한 걸음 진전된 자료를 내놓는 등 몇 가지 건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상을 보였다. 그러나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까지 위원회가 벌인 활동은 조사대상의 10%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아직 손도 대보지 못한 조사 대상 의문사가 태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까지 조사활동을 끝낸다는 것은 시늉만 내보고 그만 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가기관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을 배치한 것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작용을 빚어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구멍이나 찾는 식이라면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국정원, 검찰, 기무사령부, 국방부 등 피조사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기관 파견 조사관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일맥상통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협조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조사 기관, 기관 파견 조사관들이 뺨대기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 현상이라고만 하기에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하루속히 의문사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하고 여기에는 활동시한 연장과 방해꾼 처벌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용두사미꼴이 되기 십상이다.

(끝)

의문사규명위 와해 위기

위원장·위원2명·파견조사관 전원 사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梁承圭 위원장)의 상임위원 3명과 실무급 간부 9명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 위원회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양 위원장은 14일 오후 "위원회의 파행과 관련, 15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태(金亨泰) 제1상임위원과 문덕형(文德炯) 제2상임위원도 양 위원장과 함께 사퇴서를 제출기로 했다.

양 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 3명 전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과장급 4명, 팀장급 5명도

양 위원장에게 일괄 사직서를 썼다. 그러나 민간 출신 팀장들과 조사관들은 사표 제출을 유보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말 일부 의문사 유가족들이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으로 위원장실을 점거한 사태가 발생한 데다 비상임위원 3명이 사퇴서를 내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이 마비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위원장과 실무 간부들까지 모두 사표를 낸 것은 위원회의 위기를 유족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창구기자

역사 바로세우기 소홀히 말아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사퇴서 제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강제수사권 확보 등 의문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다 활동시한을 9개월 남짓 남겨두고 틀을 다시 짜기도 어려운 노릇이어서 자못 걱정스럽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과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진정이 접수된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과 타살의 증거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유족들의 불만을 산 것이다. 우리가 거듭 지적해 왔거나 문제의 근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군 등 의문사 관련 기관들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이 시점에서 유가족들의 422일에 걸친 최장기 농성 끝에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특별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폭력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과 죽은 이들의 명예회복 외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가 우리 역사에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는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은 역할을 자행했던 과거를 묻으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잘못을 반성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과거 청산 문제는 총체적인 국정의 난조에 자칫 가려질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역사 바로세우기에도 소홀히 말아야 한다. 모두 역사 퇴행의 공범이 될까 두렵다.

“억울한 죽음 파헤치는 것 만큼 ‘민주화’포장 벗기는 것도 의미”

“의문사 유가족이든 가해자든 조사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실제적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전달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양승규(梁承圭·68) 위원장. 그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된 것을 벗겨내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항의투서 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1988년 5월 서울 강남의 모병원 정신병동에서 사망한 고정희씨 사건과 관련, 양 위원장은 “고씨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밝혀져 종결했다”면서 “유족들의 한과 아픔은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 없다”고 말해 진상규명의 원칙을 놓고 제기되는 고뇌의 일단을 피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일부 유가족이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위원장실 점거농성에 대해 “공적 기관을 무력화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어떤 수모와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7명의 위원이 상임위원 교체를 요구하며 불거진 내부갈등으로 위원회 기능이 마비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한강화는 필요하

지만 헌법과 형사법의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검찰에만 수사권이 부여되는 법체계에서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사권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회가 2000년 10월 출범한 뒤 진상을 규명한 14건의 의문사와 실제에 접근하고 있는 최종길·장준하·이내창 사건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또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돼 시민을 사살하고 입매장했던 사실을 지난해 5월 밝힌 한 특전대원의 양심고백을 가장 인상깊었던 일로 꼽았다.

위원장직은 사퇴하더라도 위원으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 그는 “기록을 은폐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진정기관과 민주화운동의 희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느니 차라리 의문사로 남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좀더 정직해져야 함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박호근기자 rootpark@sgt.co.kr

위기의 의문사규명위 어디로 가나

이슈 추적

조사시한 3개월 앞두고 위원장등 10여명 사퇴
유가족들 조사방식-기간 불만-농성으로 갈등
張俊河사건 등 성과-시한연장 법개정 될듯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활동 시한 3개월여를 남기고 위기를 맞고 있다.

양승규(梁承圭) 위원장 등 상임단 3명은 15일 '위원회 활동의 실질적 마비를 가져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고 14일 실무 과장과 팀장 등 10여명도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갈등의 전개=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3건의 진정 중 15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중 2건이 의문사로 인용(認定)됐고 12건은 기각, 1건은 각하했다.

각각 사건이 예상외로 많자 일부 유가족들은 위원회의 조사 과정과 기간, 방식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각각 사건들은 모두 민간조사관과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같이 조사했고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처리돼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 개정 문제도 "위원회가 초법적 기구가 아닌 이상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해 특수조사과장 등 민간인 전문위원 4명이 사퇴하고 이어

일부 유가족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위원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갈등의 원인=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위원회측과 유가족측간의 견해차가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측은 의문사위원회가 비록 유가족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유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유가족측은 자신들은 단순한 진정인이 아니라 의문사를 함께 풀 동반자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가족들은 위원회가 유가족을 소

외시킨다고 판단했고 위원회는 조사 활동이 일부 유가족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전망=위원회는 그동안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와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실족사'했다는 이내창(李來昌)씨 의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 발 다가섰다. 또 장준하(張俊河) 선생 사망 사건도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시한 안에 남은 68건의 진정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현재 조사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준비중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과제는 공석이 된 위원장의 임명 등 상임단 재구성 문제. 대통령이 새로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비상임위원 6명 중에서 뽑아야 한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조사 무산위기

이뤄져야 조사 무산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임시국회 개회를 1주일 남짓 남긴 상태에서 유는 대부분의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직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 내부에서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던 모 비상임위원은 이를 거부하며 외국으로 출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퇴한 일부 상임위원들은 비상임위원직마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재구성해 국회동의 절차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개정 작업 역시 규명위

새 상임위 구성 못한채 특별법 개정안 미정 '최종길 교수'등 주요7건 조사 만료일도 임박

아직 규명위 특별법 개정안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상임위원단 구성마저 늦어지고 있어 해결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

여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재구성해 국회동의의 절차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개정 작업 역시 규명위

에 강제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유가족과 특별법개정 소위원회간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들은 "26일 규명위 해체요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토의한 후, 28일 특별법 개정과 관련, 유족들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다음주 중 상임위원단을 구성하고, 법 취지에 맞춰 유가족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면 2월 중에는 특별법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최종길 교수 전기고문死 가능성"

日법의학자, 부검기록 검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

소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부검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 교수 몸에 난 상처 중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사후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영명이와 허벅지 그리고 오금 부위에 난 상처

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적 소견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일치하며 머리나 가슴에 생긴 상처 역시 단순한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의학적 검토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최 교수 뇌 내부의 출혈은 전기고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법의학적 검토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이름값도 못하고 간판 델 판

헛도는 국민의 정부 위원회들

기획취재

"헛도는 계속 들어오는데 저걸 어쩌나."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처에서 교도소 의문사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는 장면을 지켜보던 30대 자원봉사자의 말이다.

3년간의 진정 끝에 지난해 11월 발족한 인권위는 현재까지 9백49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나 단 한 건만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을 뿐이다.

조직 규모와 대응 문제를 놓고 아직도 행정처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일손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장의 독단에 의해 정적이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여러 부

위원회의 민간인 출신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런 인적 구성에서 의문사 규명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의 요구 중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에 끌려가는 게 현 정권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능 중복=현대판 '신문고' 격인 국민고충처리위(1994년 출범)는 지난해 약 16만건의 진정을 상담·접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 등 유사한 위원회의 발족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충처리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업무는 고충처리와 조지를 약간의 확대하면 수행이 가능한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자주 만들어 행정 인



조직 구성이 불연속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족을 향으로 중심을 잃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생서 기자

인권위, 9백건 접수 1건 처리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개점휴업

문명권·국정원출신 등 뒤범벅= 내부 조율 안돼

처가 관려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집행·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제도는 긍정적 측면도 많다.

그러나 DJ정부가 만든 일부 위원회는 기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강행했거나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 과정과 예산·인력의 낭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여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부 갈등=2000년 10월 출범한 후 정부기관과 갈등이 지속돼온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근에도 이내장씨 의문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규명위는 관계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지난해 접수된 83건 중 15건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규명위 조사팀에는 과거 사노청 등 내부부 단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나온 요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력을 중복 투입하는 것은 '작은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광일 전 고충처리위원장은 "40명 정도를 총원인 인권위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원을 늘려가자는 제안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도 입법 과정에서 감사원 등과의 기능 중복 논란이 벌어졌으나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출범이 강행됐다.

◇'있으나아니' 위원회='세계 일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현 정부 초기에 화려하게 출범한 제2건국위는 지난해 '내부 행사'에만 열렸다.

지난해 지출한 행사 경비 9억 2천여 만원 중 93%가 워크숍·연찬회 등에 쓰였다.

98년 4월 출범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 차관급 합동회의를 여섯 차례 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에서 차관이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부·재정경제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도 차관이 한 차례 참석

연도	위원회명	연도	업무	정원	2001년 예산
	국가인권위	2001.11	인권상황 심의조사 및 구급시설 내 인권침해 사실 고발	40명	40명
법률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	2000.10	공공기관 등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 산출	23명(14명)	28억
	중소기업특별위	1998.4	관련부처 중소기업 육성 시책 심의·조정	40명(12명)	14억9천만
지방위원회	부패방지위	2002.1	부패방지시책·제도개선사항 수립 및 심의조사	14명(9명)	40명
	중앙인사위	1999.5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83명	80억
지자체위원회	제2건국국민추진위	1998.10	민족 통합·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	40명(19명)	28억
	지속가능발전위	2000.9	개발·보전 관련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권고	40명(12명)	8억9천만
특별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	2000.8	공공부문 개혁 내선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없음	8억9천만

했을 뿐 나머지는 다른 직원을 대리 참석시키거나 불참했다.

지난해 5월 위원 및 실무위원 27명이 동시에 사퇴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여파로 몇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사태였다. 위원회의 한 과장공무원은 "위원회가 제안을 해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위원회 재정비해=성공관대 행정학과 이재원(李在元)교수는 "이 정부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위원회

를 보고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들 한 줄어주고 자리 만들어주는 위원회'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다"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황성돈(黃成敦)교수는 "이 위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인권위 등 일부가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정권 말기에 출범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법적 근거는 있지만 권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차기 정권 때도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주안·정용환·손인호 기자 <joan@joongang.co.kr>

국민의 정부 위원회들 헛돈다

기획취재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 4층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40여명의 자리 중 15개가 비어 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직원 중 일부는 책상 위에 중국어 교재를 펴놓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외국어 공부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그 옆의 한 간부 사무실에선 여직원 셋이 모여 큰 소리로 웃으며 잡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위원회가 남아 있을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이 손에 잡혀있습니까." 한 40대 직원의 말이다.

1998년 10월 민족 화합과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

민官갈등에 부처간 업무중복·마찰 정부마저 조정 손놓아 파장 분위기 수십억씩 예산 쓰면서도 유명무실

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문을 연 제2건국위의 지금 모습이다. 현 정부 들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 서 출범한 각종 위원회들이 파행하고 있다.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범정부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가 곳곳에서 희석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연간 수십억원씩 예산을 쓰고 수십명씩의 공무원들을 데려다 놓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올리지 못한 채 일부는 이미 늑고리는 기구가 돼버렸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民)과 관

(官) 양쪽의 갈등, 관련 정부 부처끼리의 마찰, 해당 정부 기관과의 불분명한 업무 경계에 따른 기능 중복,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조정 능력 부족 등이 그 이유다.

2000년 10월 태어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유족들과의 마찰로 지난 15일 안승규(安承圭)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이 사퇴서를 제출해 업무가 중단됐고, 지난해 5월엔 새만금 개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부딪혔던 지속가능발전위는 위원 27명의 집단 사퇴로 수개월 동안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98년 새 정부 출범 후 생겨난 지금

까지 남아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중소기업특위·중앙인사위·제2건국위·지속가능발전위·정부혁신추진위·국가인권위 등 모두 7개. 오는 25일엔 또 하나의 위원회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생겨난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경력이 바뀌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며 술술 장래를 걱정한다. 스스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崔炳善)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중 통치철학을 수행해줄 임시기구의 필요성에서 탄생시킨 위원회들은 정권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활동이 지지부진하거나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안·정용환·손인호 기자 <joan@joongang.co.kr>

의문死특별법 개정안 제출 "공소시효 배제·강제구인"

유가족 비대위등 입법추진 "조사기한 9월15일까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 비상대책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를 방문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진상규명위도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와 관련, 기존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으로 개정, 의문사 인정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핵심적인 조사권 강화와 관련,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위원회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위원회 조사활동 기한을 기존의 4월에서 9월15일까지 연장토록 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의문사 조사권 강화”

유가족, 특별법 개정시안 제출

의문사 유가족 비상대책위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시안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시안은 참고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상규명위의 조사권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한도 당초 ‘오는 4월까지’에서 ‘오는 9월15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경찰간부가 가곡 독창회

김성용경정 세종문화회관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과 팀장으로 근무중인 김성용(39)경정이 2월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테너 김성용 애창가곡의 밤’이란 제목으로 독창회를 연다.



경찰대 1기 입학생인 김 경정은 대학 4학년이던 1984년 대학가요제와 대학가곡제 본선에 오르는 등 뛰어난 노래 솜씨를 자랑했다. 85년 경찰대를 졸업한 김 경정은 일선에서 바쁜 업무에 분허 지내면서도 경찰선교합창단 단장을 겸임, 유치장 선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 오페라학과에도 합격했다.

‘성악가 경찰’ 세종문화회관 무대선다

내달 4일 독창회 갖는 테너 김성용경정

바쁜 업무에 쫓기는 경찰 간부가 프로들도 서기 쉽지 않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과 팀장으로 파견근무중인 김성용 경정(39·사진)은 다음달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테너 김성용 애창가곡의 밤’을 연다.



경찰대 1기 출신인 김경정은 이미 대학 4학년 때인 1984년 대학가요제와 대학가곡제에서 본선에 오르는 등 노래 실력을 검증받은 ‘준프로’. 음악이 좋아 한때 성악가를 꿈꾸기도 한 그는 85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계장과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을 지내면서 경찰선교합창단 단장을 맡아 유치장 선교활동을 벌였다.

시간을 쪼개 각종 예술제와 음악회 등에도 참석하는 등 실력을 키운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지난 2000년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 오페라학과에 입학, 성악가로서의 꿈도 소중히 가꾸고 있다. 현재 5학기째 음악 공부에 푹 빠진 김경정은 이번 음악회에서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한국 가곡 ‘청산에 살리라’ 등 모두 12곡을 부른다.

이중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인권위.의문사진상규명위 정상화될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안팎의 갈등으로 그동안 파행을 겪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주를 고비로 서서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6일 출범한 이후 파행 운영됐던 국가인권위의 경우,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제령과 올해 예산안이 통과,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수개월에 걸친 행정자치부와 협의의 통해 마련된 직제령에 따르면, 사무처 조직은 5국 18과, 그리고 1소속기관(인권자료실)의 자체정원 180명에 파견공무원과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총 2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막판 합의한 예산은 192억원 규모로 위원회의 애초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기획예산처의 기존 입장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권위는 평가하고 있다.

직제령과 함께 인권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던 시행령도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서,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인권위 정상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 직급문제나 직원임용 특례규정 등 정부 부처들과 합의가 안된 사안들은 일단 위원회를 정상화시킨 뒤 추후 법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제령과 예산안의 통과로 인권위는 조만간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원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며 일반직의 경우 별정직 비율은 35~40% 가량으로 전망된다.

진상규명위도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사표 제출로 공석으로 남아있는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직의 신속한 총원을 위해 비상임위원 6명이 신임 상임위원직을 맡기로 결정,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에 따른 후임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내주에는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사표수리에 이어 비상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임 상임위원단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단 구성이 마무리 될 경우, 보름간의 상임위원단 공백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던 조사활동이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28일 유가족측이 위원회에 제출한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outh@yna.co.kr

(끝)

경관이 부르는 슈베르트 '세레나데'

세종문화회관서 독창회 여는 의문사규명족 김성용 경정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부터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특수조사과에 파견 근무 중인 김성용(金成鏞·39) 경정이 성악 독창회를 연다.

오는 2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 음악회 '테너 김성용 애창가곡의 밤'을 갖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12곡의 가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 경정은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 활동 등을 했고 나름대로 소질도 인정받았다"며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2남5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내 꿈만 좇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음악활동은 지난 81년 경찰대(1기)에 입학한 뒤로도 계속되었다. 경찰에 투신한 뒤인 지난 2000년엔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오페라학과에 합격, 실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그



는 "가장 힘들다는 일선 경찰서 조사·형사·교통과를 주로 거쳤지만, 음악만은 '떼지' 못했다"며 "나이가 들어서 꿈을 잃지 않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활력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경찰선교합창단' 단장을 맡아 경찰서 유치장 선교 활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등 노래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언제든지 내 노래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글=李泰勳기자 libra@chosun.com
/사진=李德鳳기자 leedh@chosun.com

성악가 꿈 이룬 경찰간부 김성용 경정 새달4일 독창회

"소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작은 꿈을 이제 서야 이루게 됐습니다."

성악가가 꿈이었던 경찰 간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주인공은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과 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성용(金成鏞·39) 경정. 김 경정은 다음달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테너 김성용 애창가곡의 밤'이라는 독창회를 연다.

그는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계장과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거쳐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으로 재직하다 2000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회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국회 끝내 표류

송석찬발언 사흘째 대치 한나라 "의사일정 거부"

국회가 사흘째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이 20일 2월 임시국회 거부 의사까지 밝히고 나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총무 회담을 잇따라 갖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관련기사 6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오후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 "오늘중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특위 등 2월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 총무는 "여

야 총무가 대정부질문에 앞서 극한발언 자체와 발언 실력저지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각각 밝히고 대정부질문을 계속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송석찬(宋錫贊) 의원 발언을 실력저지한데 대해 한나라당측이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지 않는 한 '반쪽 국회'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21일로 예정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뿐 아니라 향후 상임위 활동 등 이달 말까지 국회 의사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50건의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진경호 이종락기자 jade@kdaily.com

‘윤석양 폭로’ 후 약속 깨 기무사, 민간사찰 계속

노동운동 조직 내사... 당시 요원들 “현재도 하고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90년 10월 이 부대 소속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2년 8월 실종된 뒤 의문사한 박태순씨(당시 27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기무사에 의해 집중적인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숨진 박태순씨 조사과정 확인 기무사측 “보안법 위반자 배후로 신원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지역 기무사 방첩과 좌경계가 박씨가 속한 노동운동 조직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기무사의 공작명 ‘000 사업’에 의해 진행됐다고 공개했다. (관련기사 29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당시 기무사 요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91년 초 박씨의 동료였던 노동운동가 이모씨가 군에 입대하자 군내 좌경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이사업을 통해 이씨와 박씨가 속했던 노동운동 조직에 대해 집중 내사를 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기무사 요원들로부터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에도 사찰이 000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92년 1월부터는 ‘XXX 작전’, 그 이후에는 ‘ZZ

Z 작전’ 등의 이름으로 계속됐고 현재도 이 사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89년 5월 박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수원지역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91년 출감. 입대한 이씨는 000 공작의 대상으로 동향탐문 및 감시대상 A급으로 분류됐다. 당시 기무사는 이씨를 통해 박씨 등이 속했던 수원지역 노동운동 조직에 대해 전모를 파악한 뒤 조직원 20여명에 대해 1년여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91년 11월 박씨와 함께 자취하던 동료 노동운동가 백모씨를 검거했고, 이후 박씨 검거를 위해 그의 자취방과 피신했던 여자선배의 자취방 등에 대해 불법수색을 벌여 비디오 카메라 및 사진 채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 수사를 전담했던 기무사 요원들은 박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92년 1월 당시 치안본부에 박씨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한 것으로 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위원회는 000 공작의 실제 규명을 위해 공작 사업의 기본계획서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기무사에 요청하고 있지만 부대측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한신대를 중퇴하고 87년부터 수원지역 공단에서 노동운동을 벌이다 92년 8월 서울 구로역 근처에서 실종됐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실종 당일 시흥역 구내 하행선 철로에서 사망해 신원불명의 행려 사망자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군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방첩활동에 근거한 내수사활동으로 당시 직원들이 이씨의 배후세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씨에 대해 내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직원들이 박씨 집을 수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급도 군내 방첩활동의 경우 유사하게 진행되며 군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관련 민간인에 대한 신원확인까지는 기무사의 방첩활동에 속한다”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걸리자잡이



박래군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의문사 1호로 기록된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숨졌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노동운동가 박태순씨가 열차에 치어 죽은 사실이 은폐되었으며,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가 고도관들의 구타로 숨진 것이 밝혀졌다. 수배 중이던 김준배씨가 프락치 공작에 빠져 체포되었고, 이내창씨의 석연치 않은 거문도행에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표면 ‘공포의 시대’에 의문부성이 죽음이 발생했다. 이 죽음에 대해 최종길 교수와 같이 중앙정보부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이윤성씨와 같이 월북하려다가 발각되어 고문 끝에 자살했다는 전혀 설득력 없는 공식발표만이 있었다. 언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발표를 영무세처럼 주워담기 바빴다. 허무아침에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 맨몸으로 부닥쳐야 했던 절대 고독의 순간. 절치부심의 순간에 우리 사회는

저를 어렵게 확인하고도 비밀문서로 분류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도 못했다. 참고인의 허위증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를 차단할 방법이 없으며,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참여한 대가가 주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외추적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들을 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기회를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 내역 감청·출구금지·입수수색 요청, 자수하거나 범죄를 시인하는 자에 대한 사면건의 동의 조사권한 강화에 대한 규정, 광권력의 개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조사대상자의 죽음을 밝혀 놓고 있다. 사건들에 대한 공식시료를 증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정도는 되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의문사 ‘의문’으로 남길 것인가

씨의 지시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증언도 확보됐고, 이윤성씨가 군 녹화사업 중에 숨졌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다음달 20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낸 주요 성과다. 위원회는 2000년 10월 구성되어 85건의 진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재 15건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65건은 조사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그래서 진정이 접수된 대다수의 의문사는 조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남산 안기부와 서빙고 보안사, 대공본사로 대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가족들은 늘 사건을 조작·은폐하려는 당국의 감시와 회유에 시달려야 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 말고는 우리 사회의 누구도 그 앞에서 뱀뱀할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실험의 장이다. 그러나 중대한 국가 범죄를 밝히는 마당에 위원회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밝히려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에 응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속에 세워진 위원회가 진실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했다. 관련 자료의 존

유엔은 이처럼 국가의 범죄로 인한 인권위헌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비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국민들은 그 진실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오래 전부터 권고한다. 국회가 의문사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하여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이에 비하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일이다. 고통의 세월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문사죄 또 ‘시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시작서를 제출한 뒤 두 달여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있는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재출근을 둘러싸고 다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와대가 이번 주말까지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양 위원장은 작년 말 일부 유족들이 위

원회 조사과정에 반발해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자 지난 1월 15일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출신 직원들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와대의 사표수리 전까지는 양 위원장이 다시 출근해 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조사 의지도 없는 정부파견 인력들의 양 위원장 재출근 요구는 항명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위원장 나와 파행막아야’ 정부파견 인사들 주장에**
“**‘조사의지도 없으면서...’ 유가족측 강력 비난**”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기자수첩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사무실은 요즘 적막강산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진 직원 60여명의 의문사위를 이끌 어온 양승규(梁承圭) 위원장과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은 지난 1월 중순 일부 유족들이 조사과정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이후 사표를 내고 50여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 9명의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던 대화의실은 직원 휴게실로 변했다. 일부 행정부처 파견직원들은 사원해 '원대복귀'하고 있다. 한 직원은 "월급 받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표류하는 의문사

2000년 10월 권위주의 정권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 유가족의 한(恨)을 풀겠다며 출범한 의문사위가 1년5개월 만에 내분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의문사위 내부의 균열은 군·검·경 총정 부기관 출신 요원과, 유족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출신 직원 간의 심각한 인식차에서 비롯됐다. 한 정부 출신

요원은 "민주화과정에서 의문사했다는 사람이 정신착란으로 부신자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단체 출신들은 "의문사위의 권한을 확대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정부 출신들은 소극적으로만 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모든 의문사가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이상론(理想論)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88건의 접수사건 중 타살로 확인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장관급 위원장이 사표를 낸 지 두 달이 되도록 팔짱만 끼고 있는 청와대에 있다. 위원회가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계류(醵留)'이 돼버린 탓일까. 청와대는 위원회와 유족 양쪽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鄭佑相·사회부기자 imagine@chosun.com

미궁에 빠진 의문사규명위

위원장 공석으로 두달째 파행 운영
직원들 "위원회간부진 무대책" 비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 위원회 조사과 직원들은 7일 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직원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돼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의문사 사건의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서는 또 "최근 잇따른 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위원회 간

부들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유출한 조사관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하는 한편 징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조사관들의 조사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 직원들은 "현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두 달 가까이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태로 있어 조사관들이 조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조사1과 조남관(趙南寬) 과장은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 의문사 사건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태라 조사 결과를 발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현재 양승규(梁承圭) 위원장과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이 유족들의 퇴진 요구에 따라 1월 중순 사표를 내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등 운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양 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 의견서를 보내 "이번 주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무단결근의 능을 쓰지 않기 위해 다음 주부터 위원회에 출근하겠다"고 밝혀 위원장 퇴진을 요구해왔던 유족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청와대는 최근 이모 변호사에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제의했으나 이 변호사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미기자 kimsumi@donga.com

공무원 집단항명 파문

8일 오후 서울 중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2층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위원회 사무국 한쪽 벽에는 직원들에게 전달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게임 및 오락 금지' '근무시간 준수' 등의 게시물이 붙어 있다.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기준에 어긋난자를 보여주는 예이다.

태생적 한계 의문사 규명위 예견된 사태

배경과 전망

한 민간조사관은 "지난해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파견 공무원들의 태도가 경도를 벗어났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출근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들여다 보기 일쑤"라고 말했다.

군·검·경,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은 비롯해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등의 공무원들이 벌인 '파견 집단항명'의 배경에는 의문사규명위가 갖고 있는 한계

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검찰, 경찰, 군대, 정보기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의문사규명위를 통해 자신의 소속 기관이 과거 행한 불의와 비리, 거짓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근속스러운 입장에 놓인 파견 공무원들이 국가의 이익과 소속기관의 이익 사이에서 파행이 벌어졌다.

이들중 일부는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소속 기관에 몰래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또한 수사권이나 소환권, 기소권이 없어 피수사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 적극적인 수사의 지를 보이지 않기도 했다. 유가족을 비롯해 의문사규명위에 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셈이다.

한 검찰 파견공무원은 지난 97년 수배중에 쫓기다 승진 김준배(당시 26·현충원 투쟁국장) 씨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당시 담당경사의 소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수사의 진척을 막기도 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표면적으로는 지난 1월 15일 제출된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사퇴서를 청와대가 아직 처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한달 보름동안 위원장직이 비어선 직원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지고 일할 의욕도 잃고 있다. 후임 인수도 가려져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민간 조사관은 물론 파견 공무원들도 대부분 "청와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파견공무원들은 지난 2일 건의서를 통해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양위원장을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다시 위원장직에 앉히는 것이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국 한 직원은 "법적으로는 위원회의 모든 결정권한은 양위원장에 있다."면서 "양위원장이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집단항명 관련 일지

2001년 10월 10일 - 2002년 3월 8일: A timeline of events related to the public employees' protest and the inquiry committee's operations.

파견공무원들 국가·소속기관 이익 혼동
위원장직 한달이상 공석... 조직원 동요
관련자 징계 불가피... 초심으로 돌아가야

취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식은 곤란하다."면서 "파견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소속기관에 징계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견 기관에서 한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면 국가공무원법 등 해당법들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단 청와대가 해결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양위원장의 후임인선을 매듭지어 달라는 요구다. 또한 위원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에서는 "유족들을 자극하는 방식이나 그들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에 특별검사 배정

국민대 이재승(李在承·법학) 교수는 "민간이던 파견 공무원이던 과거청산의 의지가 없고 솔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끼리 민주주의와 인권,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崔在勳) 사무국장은 "이번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과거청산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정장을 통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특별검사'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기자 youn@kddaily.com

情·軍·檢·警서 파견된 의문사추 23명 공무원 첫 집단항명

위원장인사 반발 '건의서'

군과 검·경찰, 국가정보원 출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항명성 집단행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文德炯)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지난 2일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위원장직을 문덕형 상임위원이 대행하기로 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3명의 파견공무원 연서명 건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 관련기사 6면

이들은 건의서에서 "문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할 뿐, 권한대행은 아니다."면서 "문 상임위원이 지난 1월15일 파견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제출했던 원대복귀 신청서의 수리 또는 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승규 위원장이 지난 1

월 제출한 사퇴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문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양 위원장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파견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비리와 불의를 파헤치는 위원회의 임무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처럼 이해관계에 얽혀 조직적 반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상임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항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견 공무원들은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들의 의견일 뿐이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항명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위원회가 남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한상범교수 내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후임으로 동국대 한상범(韓相範·사진·66)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실무진이 유족들과 상의한 끝에 한 교수를 후임 위원장으로 결정했으며, 한 교수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73년부터 지난달 퇴임하기까지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인권정보센터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학술회의 참석차 일본에 가 있는 한 교수가 귀국하는 대로 양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기자의 눈

이진희 사회부 기자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낯익은 사무실에는 뜻밖에 요즘 봄 햇살 같은 나른함이 감돈다. 한가로운 얘기들을 나누고 있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모습도 눈에 뜨인다. 사명감과 긴장감이 연상되는 명칭과는 영 다른 분위기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저 사람들 중요 사건을 8개월째 손도 안 대고 있어요" 한 민간 조사관이 파견 조사관들을 가리키며 머리를 저었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관은 민간인 25명에, 군 경찰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에서 파견된 27명을 합해 모두 52명. 하지만 핵심사안은 아무래도 전문 수사기술과 경험을 갖춘 파견 조사관들에게 크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도무지 이들이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실제로 한 경찰 조사관은 상부에 올리는

동향보고에만 신경쓰다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군 조서관은 최근 "의문사로만 국한 돼야지, 왜 녹화사업까지 손을 대느냐"고 조사방향에 정면 반발하기도 했다. 옛 수사감사의 소환을 검찰 조사관이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위원회에 출두한 모 전직 교도관은 "이미 며칠전 법무부로부터 조사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순진하게 털어 놓기도 했다.

하기야 조사란 것이 대개 '진정'의 옛 비리와 직접 관련돼 있는데다, 곧 복귀해야 할 처지니 이들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을 삭이며 수년에서 수십년을 기다려온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견도 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조사 의뢰된 의문사 대상자들 상당수가 이런 식의 왜곡된 집단 이기주의에 희생된 이들 아닌가. river@hk.co.kr

의문사추위원장 韓相範씨 내정



청와대는 지난 1월15일 사표를 낸 의문사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 위원장 후임에 동국대 법학과 한상범(韓相範·66·사진)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새 위원장 한상범 동국대교수 거론



1월 15일 사표를 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 위원장 후임으로 동국대 한상범(韓相範·66)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제출 후 거의 두 달 만인 11일 정상 출근한 양 위원장은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상규명위의 후임 위원장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출근하기로 했다"며 "오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위원장 후임에 한 교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학술회의 참석차 일본에 가 있는 한 교수가 귀국하는 대로 양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의문사진상규명위 '집안 단속' 급선무



임원들 통제력 상실에 실무진간 갈등 ... 정보 누수 잇따르고 조사는 제자리

"아무도 안 계십니다. 조사관을 접촉하고 싶으시면 먼저 홍보팀 허락을 받으세요."

3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2층에 위치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1과 사무실 문을 들어서는 기자에게 한 조사관이 차갑게 말을 받는다. 평소와 사뭇 다른 냉랭한 분위기다. "지난주 기사 때문에 조사관이 징계 먹게 생겼습니다." 대답과 함께 조사관은 사무실 문을 닫는다.

지난주 기사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의 자살 가능성이 위원회 내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는 3월7일자 동아일보 기사. "최종길 교수에 대해 고문이 이뤄졌다는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조사팀은) 최교수가 이를 건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는 최종길 교수가 중정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그간의 위원회 입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 위원회의 확인성 사무국장은 문제의 '내부 관계자'인 조사1과 한 간부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플레이로 상층부 압박說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위원회 출범 이후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그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30여건의 기사 가운데 위원회의 주도적인 정보공개로 보도



시평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장

죄 많은 특권층

고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당시에 외국 자선 기관에서 고아를 입양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에 대한 외국입양은 그후 60년대 이후에도 이어 졌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근대화는 고아 등 심각한 사회복지 문제는 외면한 채 '고아 수출국'의 불명예를 방치해 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 에서 서도들 누리고 부를 독점하는 도의 불감증 의 무책임한 말쑥한 나는 경멸해 마지않는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국부'를 자처하면서 자기의 증복 이기쁨의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삼 고, 그 양자를 유서에 특별로 입적시켰다. 그렇지 만 이강석은 이승만의 몰락 직후 자기 부모를 비 롯한 형제 등을 권총으로 쏜 죽이고, 스스로 권총

산국 총리를 비유해서 트집을 잡으려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고 들어 보시라. 중국에서 항 일권 단시에 저우언라이·덩잉차오 부부는 전쟁 고아 몇백명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되어 그 들을 돌봐주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말 잃었다. 우리는 이승만의 양자소동과 이 기봉 한 집안의 몰살·몰락을 보는 이외에 예방 뒤 권세와 부를 누리는 이들의 모리배 짓으로부 터 온갖 부정부패를 보아오고, 그것도 부족해 권 력담욕 때문에 광주를 피바다로 만드는 반인륜 범죄자의 만행까지 보아온다. 이들이 아직도 잘 사는 나라다. 그들의 철저한 가족이기주의와 공 공정신의 결여는 놀랄 만하다. 봉건유교의 시대

에 맞지 않는 구유물인 입신출세주의와 가문·족 별주의가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전부다. 이 런 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에 왔으니 어찌될 것 인가?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에 철저하게 가생하 는 이들이 가르쳐 온 것은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란 힘센 외세나 부패세력에 종사기다" 하 는 교훈을 산 지식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전쟁을 겪으면서 무수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며, 4·19와 같은 전기를 한사코 가로막아서 뒤집어엎고 기득권을 누려오 는 젊은 사람들, 이들을 권의상 특권층이라고 하 자. 이들 기득권 부류의 끝모르는 눈먼 탐욕은 아직도 우리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본 다. 거기다 근저에는 베트남에서 고아 아닌 고아 를 만들고 도망쳐 와서 못할 일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그것을 반성·사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또 중국에서 한국 혈육을 출산한 여인들과 그네 의 아이들을 불행하게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 다. 왜 이러는가! 나라타의 어느 호텔 식당에서 비애로 가득 찬 아이의 눈초리가 말하는 시연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서린 비애의 표정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나게 해 가슴이 아팠다. 비 행장이나 근처 호텔에선 골프채 끌고 관광에 나 선 한국인들을 본다. 그들의 얼굴은 자기 만족과 오만으로 차 있다. 누구의 피압과 눈물, 노력의 대가로 호강하는 그들은인지? 죄 많은 특권층, 이 나리가 그들의 소유물로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

연합뉴스

"70년대 전향공작 기관개입 물증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기 위해 실시 된 '전향공작'에 중앙정보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1978년 당시 법무부 예규를 입수, 조사한 결과 중 앙정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향공작을 교사, 묵인했음을 입증하는 법무부 공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이 공문들은 '전향공작전담반 운영 지침사항'을 비롯, '전향 계획서 매월 작성 및 보고', '극렬 비전향수에 대한 새로운 전향기술을 연구 및 개발과 성과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진상규명위는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전향공작 과정 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교도소 기 록에는 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 및 폭행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당시 전향공작의 실체를 입증하는 희생자들의 교도소 내 기록과 법무부의 공문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진상규명위에서 조사 중인 비전향 장기수 관련 의문사는 지난 74년 대전교 도소에서 사망한 박용서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south@yna.co.kr

(끝)

70년대 비전향 장기수 전향 테러공작 국가기관 개입 공문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 곧 자료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그동 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비전향 장기수 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 사실을 확인 하는 공문을 확보해 이를 곧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명위가 확보한 공문은 1978년 당 시 법무부 장관 명의의 예규로, '전향 공작전담반 운영지침사항'을 비롯해 '전향 계획서 매월작성 보고', '극렬 비전향수에 대한 전향기술을 연구 개 발해 성과를 보고할 것' 등 전향공작 의 실체를 입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 다. 그동안 장기수들의 증언 등이 잇 따르긴 했지만, 전향테러 공작이 공 식문서를 확보한 국가기관을 통해 드

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공문에는 전향공작을 할 때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와 긴밀히 협 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중앙정보부와 긴밀한 협 조 아래 전향공작이 이뤄졌다"는 참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전향공작과 관 련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사실과 함께 당시 의문사한 장기수들의 검시를 맡 았던 수사기관의 은폐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명위는 이와함께 비전향장기수 의 강제전향 작업을 위해 수감중인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사실도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 명위는 "일반 재소자였던 폭력배 출

신 조아무개씨가 당시 교도관의 지시 로 함께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 박아무 개씨를 폭행해 전향서를 쓰게한 뒤, 그 대가로 출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 했다. 이른바 '떡봉이'로 불리는 전향 공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중 한 명은 사행행위로 현재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근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된 한 문서 에는 "전향공작에 공모가 크니 귀휴를 보내달라"는 요청서가 발견되기도 했 다고 규명위는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규명위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인 비전향 장기수 관련 의문사 는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용 서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신운동욱 기자 syuk@hani.co.kr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 전향공작

국가기관 개입 폭행·고문

■ 의문사족 곧 자료공개

강제급식·바늘찌르기 등
일반무기수가 고문에 가담
전향시킨 대가 조기출소도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기 위해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인권 유린행위가 자행됐고, 이 과정에 법무부 중앙정보부 등 국가 기관이 적극 개입한 사실이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1일 밝혀졌다.

규명위는 전향공작의 실체를 입증하는 희생자들의 신분장(身分狀·교도소에서 각 수형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생활을 기록한 문서)과 전향공작을 교사·목인했던 법무부의 공문 등을 확보, 조만간 중간 발표와 함께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 동안 장기수들의 간헐적 폭로와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향 테러'가 관련 문서와 가해자의 폭행 등 방증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에 따르면 법무부 공문들은 '전향공작전담반 운영 지침사항'을 비롯, '매월 전향계획서를 작성 보고할 것' '극렬 비전향수에 대한 새로운 전향기술을 연구·개발해 성과를 보고할 것' '전향에 도움이 될 때만 가족 면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향 공작시 중앙정보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 전향공작 과정 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의 신분장에는 '집중 격타 공작'을 시행한 사실이 기록돼 공공연하게 상시적인 고문 등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 있다.

규명위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단식자에 대해 위장에 고무호스를 찢러 넣어 소금물을 붓는 강제급식, 바늘로 찌르기와 성추행 등의 참혹한 고문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함께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를 폭행, 강제전향시킨 대가로 무기수가 조기 출소 혜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용서(朴隆緒)씨 의

문서를 조사한 결과, 당시 교도소 측이 박씨의 폭행 담당자를 사직시켜 유아무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일반재소자였던 폭력배 출신 조모씨가 당시 교도관의 지시로 함께 수감됐던 비전향 장기수 박모씨를 폭행해 전향서를 작성케 하고 그 대가로 출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지침과 "중앙정보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중앙정보부의 개입 정도와 당시 의문사한 장기수들의 시신 검시 등을 맡았던 수사기관의 은폐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의문사 규명위는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박용서(孫鎭圭·76년 사망) 최석기(崔錫基·74년) 변형만(邊衡滿·80년) 김용성(金庸性·80년)씨 등 5명의 비전향 장기수 유가족과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장기수들이 2000년 10월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진정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의문사 및 전향공작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1970년대 전향공작 물증 확보"

의문사규명위, 국가기관 개입 확인 ... 법무부 공문 공개방침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1970년대에 비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기 위해 중앙정보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 '전향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1978년 당시 법무부 공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중앙정보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전향공작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가 확보한 공문은 1978년 당시 법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사항'을 비롯해 '전향 계획서 매월작성 보고', '극렬 비전향수에 대한 전향기술을 연구 개발해 성과를 보고할 것' 등이다.

이 공문에는 전향공작을 할 때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중앙정보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전향공작이 이뤄졌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전향공작과 관련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사실과 함께 당시 의문사한 장기수들의 검시를 맡았던 수사기관의 은폐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향공작'에 대한 장기수들의

증언은 끊이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의 공식 문서를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규명위는 함께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를 폭행, 전향시킨 대가로 무기수가 조기 출소 혜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모씨의 의문사를 조사한 결과, 일반 재소자였던 폭력배 출신 조 모씨가 당시 교도관의 지시로 함께 수감됐던 비전향 장기수 박 모씨를 폭행해 전향서를 작성케 하고 그 대가로 출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된 한 문서에는 "전향공작에 공로가 크니 귀휴를 보내달라"는 요청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규명위는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당시 전향공작의 실체를 입증하는 희생자들의 교도소 내기록과 법무부의 공문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진상규명위에서 조사 중인 비전향 장기수 관련 의문사는 지난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용서씨 사건을 비롯 손운규씨(76년 사망) 최석기씨(74년 사망) 변형만씨(80년 사망) 김용성(80년 사망) 등 5건이다.

의문사위원장 한상범씨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韓相範·사진)위원장(장관급)과 김준곤(金俊坤)제1상임위원(1급 상당)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韓위원장은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로 민족문제연구소와 불교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국회 여성위원장 이연숙의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특위에서 상임위로 전환된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연숙(李燕淑)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는 또 한상범(韓相範·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김준곤(金俊坤·변호사) 신임 의문사진상위원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의문사규명위원장 한상범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김준곤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

과시켰다. 청와대는 지난달 전임 양승규 위원장의 후임으로 동국대 교수 출신인 한상범씨를 내정한 바 있다.

▶ 관련기사 29면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상범 새 위원장

“마지막 남은 한방울의 진실까지 캐낼터”

“의문사 유가족의 눈으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진실까지 찾아내겠습니다.”

9일 국회의 임명 동의안 통과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 신임 위원장을 맡게 된 한상범(66·사진)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취임 일성부터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1961년 동국대 법대 교수로 임명돼 지난해 정년퇴임한 한 위원장은 소장 학자 시절부터 줄곧 역사청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진보적 법학자로 이름이 나 있다.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장,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고, 지난 3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선정 과정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또 국내에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친일과 청산과 독재시절 의문사 규명활동은 역사청산의 맥락이라

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며 “단순히 자·타살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아니라, 역사청산 관점에서 의문사를 낚은 구조적 원인까지 파헤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 앞에는 적지 않은 장애가 놓여 있다. 국정원, 기무사 등 의문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조사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규명위 활동이 오는 10월이면 마감된다는 점도 새 위원장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자료를 내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남겨진 의문이 있다면 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글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사진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특새의자

의문사규명위원장 한상범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한상범(韓相範·사진) 동국대 법대 명예 교수를 임명했다.

△경기 개성(66세) △동국대 법학과 △비교사법학회 회장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인권정보센터 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아침을 열며

강경인 서강대 정의학과 교수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들어 있는 5월은 인륜공통체로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확인하는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현대정 치사에서 5월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항쟁, 91년 5월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죽음의 장막이 짙게 드리워진 달이 되었다. 아직도 가슴을 저미며 살아가는 민주투사의 유가족에게 5월은 인륜을 상실한 아픔에 시달리는 잔인한 달로 서성거리다. 나는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아직도 인륜 상실과 공인된 '거짓말(?)'의 고통에 시달리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진실과 정의의 빛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혹 안가신 유서대필 사건
91년 5월 부정을 예로 들면, 먼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의 의문 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박씨는 구치소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 7층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경찰이 사신을 강제 탈취하여 강제 부검을 실시한 후 투신

자살로 단정 지어 발표한 사실 등 여러 주변정황을 고려하면,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아버지가 참가하던 집회에 나와 발을 두들겨 달라는 목소리

5월 아버지의 피눈물

리로 '남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어린이 들은 물론 부인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열정하게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5월에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김씨의 분신을 전후 하여 일부 지식인 및 성직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분신자살의 배후에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잠복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신자살한 젊은이의 순수성 및 자율성에 관련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당 기야 수사에 나간 검찰은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김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과 관련하여 '발행 일시·장소도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고 보도된 내용으로 발표문을 쓰려니 부끄러워 사표를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 담당 검사의 발언, 판결문에서 '신이 아닌 인간이 내린 판결임을 이해해 달라'고 실토한 담당 판사의 발언 등은 이 사건의 재판에 강력한 외압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는 뜻을 밝고 떠난 것이지요. 게다가 자기 죽어서 나라가 잡힐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의문사등 진실 규명해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과거 군부 정권 하에서 일어난 정치적 의문사, 민간인 학살, 민주화 관련 사망자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돌출 제기돼 왔다. 과거청산의 문제는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그리고 진실의 공인과 정의의 실현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피눈물 어린 투쟁에 힘입어 새 헌법을 앞둔 1999년 12월 28일 마침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나 진실고백을 조건으로 사후에 사면을 하는 조항이 결여되는 등 진상조사를 촉진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된 바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군부정권 하에서 일어난 정치적 가전 파괴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인륜적 아픔을 진실의 공인과 정의의 실현을 통해 치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기부 예산으로 공작비용 책정했다”

진상규명위, 국보법 위반과 검거실태 밝혀 경찰 특진제 남용이 프락치 공작 원인

경찰의 특별진급제 남용이 학원 '프락치 공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를 위해 공식적으로 공작원비가 책정돼 있으며 예산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부담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에 따르면 '제5기 한총련 출범 관련 이적·독려행위자 검거대상 조정계획'이

라는 정부기관 공식문건을 분석한 결과, 309명의 수배자 검거에 '특진'을 내건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문건에는 국보법 위반자 140명과 형사사범 169명 등 한총련 관련 309명의 수배자를 검거할 경우 경감 3, 경위 23, 경사 88, 경장 195 등 특진의 구체적 계획까지 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준배(당시 27세)씨가 학원 프락치 공작에 연루, 죽음에 이른 것도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특진제

남용이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97년 한해 경찰특진자 823명 중 한총련 수배자 검거로 특진한 경찰수가 전체의 28.9%"라며 "당시 경찰들 사이에는 대공·보안수사관련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 중 보안요원이 아닌 사람이 국보법 위반 사범을 검거한 사례도 전체의 2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배씨 검거에 나섰던 이모씨와 도모씨 모두 보안과 소속이 아닌 일반 형사과 소속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요원로부터 보안수배자에 대한 프락치 공작은 경찰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진

행됐으며 대부분이 돈을 써서 프락치를 포섭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97년 당시 보안수사대원이던 강모씨와 김모씨는 "공식적으로 공작원비가 다소 책정돼 있고 예산은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부담했다"며 "정보원의 경우 A, B, C급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지급되는 액수도 다르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이 수천만원을 들여 프락치를 이용, 수배자를 잡으려 다녔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한제도 한총련 및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를 위해 '협조자 운용'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는 진술을 받아들였지만 국정원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그렸음직한 용이바주동 토의신씨 부지연안”

한글서체로 된 제목과 부제, 그리고 저자나 발행처에 대한 정보. 텍스트는 매우 작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본문 내용의 첫 번째 단락. 여러 줄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의 두 번째 단락. 텍스트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5월 이바사의 피눈물

본문 내용의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의 텍스트로, 여전히 가독성이 낮습니다.

발행일 : 2002년 7월 15일
발행인 : 한상범 편집인 : 황인성
발행처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2F
연락처 : 3703-5975~7(TEL), 3703-5978(FAX)
홈페이지 : www.truthfinder.go.kr
인쇄 : 덕산인쇄(2279-6548)